

사회주의체제의 변화와 북한의 변화전망*

고충석* · 강근형** · 고성준*** · 장원석****

目 次

- I. 서 론
- II. 東歐變革의 性格과 展望
- III. 소련 체제의 변화와 전망
- IV. 中國式 社會主義의 理念과 展望
- V.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의 현황과 전망
- VI. 맺는말

I. 서 론

소련과 동구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주의체제의 변화는 오늘날 세계가 고도의 국제적 상호의존성을 지닌 하나의 지구촌임을 감안할 때 기존의 국제질서에 획기적인 대전환을 초래하는 사태로 인식될 수 있다. 공산주의사회의 이상을 표방하여 프롤레타리아계급의 독재를 주장하였던 20세기의 역사적 대실험이 실패했음을 오늘의 동구사태는 보여주고 있으며 그것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이제 종언을 고하고 있음을 뜻한다.

현재 사회주의체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는 일은 21세기로의 진입을 목전에 둔 우리시대가 올바른 미래의 좌표를 모색하기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더구나 한반도에 있어서 동구권의 변화와 관련하여 북한체제의 변화

* 이 論文은 1990年度 敎育部支援 韓國學術振興財團의 大學附設研究所支援 學術研究造成費에 의하여 研究되었음.

*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 제주대학교 국민윤리교육과 부교수
*** 제주대학교 국민윤리교육과 교수
**** 제주대학교 국민윤리교육과 조교수

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전망하는 일은 본단의 극복과 통일을 위해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다음의 문제를 분석해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첫째, 현 사회주의국가의 체제개혁은 어떻게 유형화 될 수 있으며 그것의 원인과 양상은 무엇인가? 둘째, 이러한 개혁의 유형과 관련하여 북한체제는 어느 유형에 더 유사한 경로를 취하게 될 것인가? 셋째, 예상되는 북한체제개혁의 방향은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 통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본 논문은 현재 진행중인 사회주의체제개혁의 유형을 동구형, 소련형, 중국형으로 크게 3분한다.

동구사회주의국가의 경우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에 의해 점화된 개혁의 열기는 밑으로부터의 민중혁명을 야기시켰으며 그 결과는 전면적인 경제개혁과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로 귀결되었다.

소련의 경우 91년 8월 쿠데타이전의 시기에 있어서 변화의 양상은 소련공산당 주도하에 전개되어진 일종의 위로부터의 혁명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는 소련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시도함으로써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최소한의 신념표명에도 불구하고 누적되는 변화로 인하여 체제의 성격을 의심스럽게 만들었으며 페레스트로이카의 본질을 둘러싼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소련사태 이후 엘친주도하의 소련은 명백히 탈사회주의노선을 추구하고 있으며 후기 페레스트로이카의 상황은 동구사태의 결말에 접근하고 있다. 다만 소련의 경우 장래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많은 변수가 존재한다.

천안문사건의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등소평이 이끄는 중국정부는 실용주의 노선에 입각하여 점진적인 경제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나 정치개혁의 문제에 있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택하는 이중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사회주의 체제의 본질을 포기할 수는 없음을 강조하면서 중국식 사회주의의 고수를 천명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동구형이나 소련형과 유사한 변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주체사상의 이념적 특수성과 아시아라는 지역적, 문화적 특수성에 비추어 볼때, 중국형에 더 접근하는 변화의 양상을 보일것으로 예측된다. 북한은 오랫동안 폐쇄적인 사회체제를 고수해왔고, 김일성개인의 카리스마와 남북한의 대치상황과 같은 특수한 여건의 존재로 인하여 조속한 시일내의 개혁과 개방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지금과 같은 고립적인 '북한적 사회주의' 노선을 계속 견지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현재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로의 권력승계문제가 북한체제변화의 중요한 변수인 바, 이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수행되느냐에 따라 북한사회주의 체제의 장래가 결정될 것이다.

II. 東歐 變革의 性格과 展望

1. 머릿말

지난 몇년동안 東歐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적 사건들은 실로 엄청난 것이어서 그것을 전통적의 미의 改革(reform)이나 革命(revolution)이라는 범주에 국한시켜서 설명하기는 힘든 것같아, 오히려 Ash¹⁾가 말하듯이 改革과 革命을 결합시킨 變革(refolution)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편이 나을 것같다. 분명히 오늘날 동유럽에서 전개되는 실제변혁의 과정은 많은 특징을 담고 있으며 나라마다 變革의 속도와 규모가 다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서구로부터 문화적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아서 비교적 多元主義的이고 민주적인 정치전통이 튼튼히 자리잡혀온 중부 유럽국가(폴란드, 동독, 헝가리, 체코)에서는 체제변혁의 청사진이 뚜렷이 제시되고 있고 또 실행단계에 옮겨지고 있으며 동독은 이미 서독에 흡수통합되어 그 形骸마저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반면 전통적으로 아시아적 문화의 영향으로 전체주의적인 정치문화가 뿌리내린 발칸지역 국가(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에서는 체제변혁案이 제시되고 있긴 하지만 그 진정한 실행여부가 불투명하고 그 중에서도 유고슬라비아는 민족문제로 연방자체의 保全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아래에서는 현재 동구변혁을 가져오게하는 배경과 그 진원을 검토해보고 變革의 선두주자인 헝가리와 폴란드에서의 정치 및 경제 變革의 내용을 주로 분석하여 보려고 한다. 그를 통하여 동시에 東歐變革에 대한 종합적인 視覺 즉 變革의 성격과 전망을 제시해보려고 한다. 여기에서 폴란드와 헝가리의 變革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두나라가 동구變革의 선두주자라는 점 이외에도 두 나라의 현재 변혁의 기본골격은 대체로 궤를 같이하고 있으며 이웃 사회주의국가의 變革에 하나의 표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1) Timothy Garton Ash, we the people: the Revolution of 89 witnessed in Warsaw, Budapest Berlin & Prague (Cambridge: Granta Books/Penguin books, 1990), p.14.

2. 동구變革의 배경과 그 진원

1) 동구變革의 배경

동구국가들의 체제變革운동은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1956년 헝가리, 폴란드, 1968년 체코, 1980~81년 폴란드에서의 민주화운동과 이에 대한 무력적탄압은 동구체제가 겪어온 위기의 극단적 표출²⁾이다. 1989년의 大變革은 그 이전에 이미 농축된 변동잠재력의 폭발적 분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989년 이전의 동구개혁주의운동이나 1989년의 대변혁은 같은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체제변혁의 증폭문제로서 과거의 改革운동이 과격한 체제變革을 피하기 보다는 사회주의의 일반적 틀 속에서 점진적인 改革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고 이 당시의 정치적 구호는 두개의 극단적인 축, 즉 자유주의로의 回歸나 혹은 New left적 의미의 “反官僚의 改革”으로 치달는 것을 피하는 추세였다. 다시 말하면 한 체제내에서 하위체제를 변경시키는데 그 목적³⁾(aim to amend a subsystem within a system)이 있었다. 이에 反하여 지난 몇년동안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함께 체험하고 있는 東歐의 大變革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정치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과격한 체제變革운동으로서 기존의 東歐改革주의 운동의 틀을 근본적으로 뛰어넘는 심층적인 변혁추구의 노력으로서 이해되어진다.

1989의 大變革을 가져온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說明方式이 가능하다. 그러나 어떠한 설명방식도 단지 부분적 이해만을 제공할 뿐이며 지각변동과 같은 대사건이 지니는 모든 측면들을 다 포함할 수는 없는 것이다. 東歐의 大變革은 1789의 프랑스革命과 비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프랑스革命은 2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여전히 학계의 논쟁주제로 남아 있으며 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분분하다. 마찬가지로 1989년 東歐에서 일어난 大變革도 향후 수십년간 아니 수백년간 열면 정치적 학문적 논쟁이 바탕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989년의 大變革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어온 것으로서 이전부터 이들 나라에서 繼起化 되어왔던 체제위기가 폭발적으로 터져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東歐大變革의 배경원인⁴⁾은 무엇인가. 단지 여기서는 잠정적으로 相定되는 몇가

2) 윤덕희, “동구정치개혁의 현황과 성격”, 서울대학교 소련 동구연구소주최 서울힐튼호텔 (1990.4.20~4.21), p.302.

3) Vladimir V. Kusin, “An Overview of East European Reformism”, in Soviet studies, vol. XXVIII No.3(july, 1976), p.338.

4) Kusin은 제2차 대전이후의 상황을 중심으로 50년~60년대 동구에서 공산체제변화인 개혁주

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려고 한다.

첫째, 東歐의 여러나라들속에 역사적으로 내재해 있는 “非東歐的 體質”이 체제變革의 숨은 바탕이 되었다.

원래 東歐라는 개념은 지리적인 개념이념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개념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西歐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산화의 길을 밟게된 지리적으로 中歐 및 東歐에 위치한 여덟나라 즉 동독, 체코슬라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및 불가리아를 일컫는다.⁵⁾ 이들 나라에 수립된 러시아화된 미르크시즘인 범슬라브주의는 동구자체의 고유한 성격과 합쳐져서 東歐의 기저문화틀 이루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련, 동구간 심각한 갈등의 요인이 되었다. 범슬라브주의는 침략적 의도가 있긴 하지만 긍정적 의미로는 슬라브왕국을 세우려는 낭만적이고 소박한 꿈으로서, 세계의 갈등과 혼란을 해결하려는 러시아의 신념과 자주성으로 볼 수 있다.⁶⁾

그러나 서구의 철학적 전통과 기독교에 대한 도전으로 나타난 소비에트 마르크시즘은 東歐諸國에 그대로 이식되지는 못하였다.⁷⁾ 왜냐하면 東歐 제국들은 나름대로의 傳統과 文化構造 속에서 마르크시즘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예컨대 동독과 체코슬로바키아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나찌가 정권을 장악하기까지 의회민주주의의 생생한 경험을 쌓았다. 폴란드는 근세사를 통하여 연속적인 외세의 침략으로 분할통치의 운명을 감수하여 왔으나

의가 대두하게된 주관적 요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먼저 객관적 요인으로 네가지틀 들고 있다.

① 대부분의 동구제국의 경우, 1945년~1948년간의 한 나라의 경제안에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비록 그 본질이 크게 훼손되었으나)가 공존했다는 사실.

② 제2차 대전을 통하여 여러나라에서 민족주의와 공산주의가 동맹관계에 있었던 사실

③ 스탈린 사후 흐루시초프에 의해 주도된 脫스탈린화 운동의 충격

④ 소비에트유형 경제체제의 실패

Kusin은 위의 객관적 요인 이외에 체제를 보다 인간화, 능률화시켜 보려는 동구 내외의 많은 개인과 집단의 의지, 다시 말해서 체제를 인간의 정신적, 물질적 욕구에 보다 대응시켜 보려는 자주적 욕구를 동구 개혁주의 대두의 주관적 요인으로 꼽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Vladimir V. Kusin, op.cit., pp.340~341.

5) 安秉永, “사회주의의 꿈은 어디로”, 新東亞(1990년 12月號), p.256.

6) 오세철, “동구제국의 문화변동과 문화정책”, 공산국가에 있어서 정책 및 정책과정의 비교 연구, 재5집(서울: 延大 동서문제연구원, 1982), pp.393~394.

7) 김달중 교수는 그 이유로, ① 강대국의 침략으로 점철된 동구의 특유한 메시아적 저항적 민족주의 ② 현재국경의 인위적 실정으로 야기된 失地回復主義(irredentism) ③ 각기 다른 공산화 과정과 이에 따른 권력 엘리트들의 상이한 성격을 들고 있다. 金達中外, 東歐 政治·經濟·社會論(서울: 박영사, 1985), p.195.

천주교라는 정신적 지주를 중심으로 고도의 民族的一體感을 다졌으며, 그 문화적 전통으로 보아 오히려 서구지향적 특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헝가리 역시 오스트로, 헝가리帝國이래 서구문화의 東進 통로로서의 역사적 경험과 인종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서구문화의 수용력이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슬라브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형편이다. 유고슬라비아의 경우 슬라바니아와 크로아티아를 주축으로 하는 북부문화권은 일찍부터 서구문화와의 접촉을 통하여 로마카톨릭에 귀화했고 민주주의적 사조와 분권적 정치질서에 익숙한 뿐더러 공업화의 수준 또한 높다.”

이처럼 近世史 내지 최근세사의 전개과정 속에서 이미 형성된 비동구적 체질은 동구제국이 “위로부터” 그리고 “외부로 부터” 강요된 공식적 정치문화(official political culture)로서 마르크시즘-레닌이즘을 받아 들인 것일뿐, 그들이 지배적 전통적 정치문화(dominant <traditional> political culture)⁹⁾로서 革命 이전부터 존재했던 자체의 전통과 문화구조는 변함이 없었다는 것을 말한다. 이 두 문화체제는 조화를 이루기도 했지만 대부분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일반적 현상인데,¹⁰⁾ 공산화 과정에서 東歐의 경우는 마르크시즘-레닌이즘에 입각한 스탈린체제의 소비에트型 공산주의 정치문화가 東歐의 전통적 정치문화의 특성인 국가의 우월성과 사회의 脆弱性, 그리고 메시아니즘이 도움으로 폭넓게 移入될 수 있었다. 그러나 戰後의 공산주의 정치문화에 대한 戰前의 전통적 정치문화의 이반으로 나타난 것이 그간에 있어왔던 체제變革 운동이며, 이에는 民族主義, 多元主義, 종교적 특성, 동구 고유의 社會文化要因 등이 작용하였다.

둘째, 국가독점적 생산양식을 근간으로하는 소비에트 경제체제의 失敗 또한 東歐체제변동의 폭을 넓혀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경제적 원인이 확실히 東歐 공산주의의 붕괴를 가져오게한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가장 명백한 원인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東歐의 여러나라들은 共產化 以前에 높은 경제발전과 공업화를 경험하였던 나라들이다. 그

8) 安秉永, 현대공산주의 연구(서울:한길사, 1982), p.177.

9) 공산국가를 정치문화측면으로 분석할 때 유용한 점으로 ① 한 나라의 정치체제의 변화와 정치변동 분석에 일관성을 제공해 주고 ② 체제의 안정도에 관한 연구의 분석틀을 제공해 주며 ③ 비교공산주의를 위한 하나의 분석 테두리를 제공해 준다. 특별히 동구제국의 정치문화론적 접근시도가 유리한 점은 ① 여러가지 이질적인 전통문화를 가진 나라들이며, ② 2차대전 이후 소련형 공산주의의 이식으로 정치체제가 불안정하며, ③ 정치의 구체적 태도도 상이하기 때문이다.

Robert C. Tucker, "culture, political culture and communist society," in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88, No.2(june 1973), pp.181~184.

10) Archie Brown, political culture and change in communist states 2nd(ed.) (London: The Macmillan press, Ltd., 1970), p.8.

런데 스탈린 체제가 이들 나라에 강요된 이래 경제는 눈에 떨 정도로 어두운 국면을 맞는다. 이들 나라경제¹¹⁾의 주된 문제는 투자와 생산에 관한 결정들이 국내외시장의 요구보다는 全的이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政治的 意志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소비자와 생산자의 욕구가 반영되는 국내시장세력을 불식하기 위하여 재화와 용역의 量과 價格은 행정명령에 의해 고정되었다. 경제에 대한 국내의 통제를 약화시킬지도 모를 국제시장세력도 배제되었다. 이를 위하여 선진자본주의 세계와의 대외무역은 명령과 불태환 통화의 유지를 통해서 엄격히 統制되었다. 시장세력의 힘을 제한하려는 목적은 달성되었지만 이러한 조건하에서는 어떠한 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단지 이를 측정하여주는 것은 품질, 이윤, 소비자의 만족도가 아니라 생산증대, 높은 고용율의 유지, 그리고 정치적으로 지시되는 투자의 유치능력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말하는 企業利益이라는 개념은 이들 나라의 기업경영자들에게는 낯선 개념이다. 이같은 집권적 경제메카니즘은 만성적인 물자부족과 저질(bad quality)의 제품을 필연적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2류 수준의 경제에 머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가 20~30年前에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았지만 작금에 와서는 매우 심각하여 진다. 과거에 비교적 빈국이었던 동아시아의 여러국가들이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생산한 양질의 전자소비제품이 세계시장에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는 오늘날 소비에트식 경제는 더이상 기능할 명분을 잃게 된다.¹²⁾

또한 동구의 스탈린주의자들은 사회주의 국가수립이후 소련이 채택한 경제모델—거대한 철강공장, 화학산업, 전력사업 그리고 대규모 자본과 노동의 집중—에 경제발전 전략의 기초를 두었다. 소련 또한 자신들이 수행했던 방식대로 산업화를 달성하도록 東歐國家에 강요하였고 많은 부분에서 이들 나라들이 성공을 이룩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經濟發展戰略은 3번째 산업시대인 유가화학과 전기의 시대에는 현실 적합성이 있었지만 5번째 산업시대인 컴퓨터와 생물공학의 시대에는 적절하게 적용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5번째 산업시대¹³⁾는 생산과정이 유연성을 유지해야 하며 급속하게 전개되는 국제시장과 지

11) Werner Gumpel, "The change of Economic system in the Socialistic countries of Eastern and Southeastern Europe causes for changes and political Effects of Reforms(paper presented at the second Korean Conference on political and Economic Changes in socialist countries and Their Regional and Global significances, Seoul, Oct.11~12, 1985).

12) Daniel Chirot, "After socialism, what? (Ideological Implications of the events of 1989 in Eastern Europe for the Rest of the world)," perestroika or History's turning point, 서울대학교 소련·동구연구소 주최 국제학술회의(1990.12.26~27), p.212.

13) Daniel Chirot는 산업혁명이후 산업시대를 5가지 시기로 區分하고 있다. 첫번째(1780~

역경제의 통합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세계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놓쳐버린 기업들은 도산하였다. 따라서 東歐의 경제모델은 소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5번째 산업 시대에는 더이상 기능할 수 없는 낡은 모델이 될 수 밖에 없다.

사회주의 경제의 非效率性이 이와같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경제개혁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경제개혁이 실효를 거두려고 한다면 國家獨占的 生産樣式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길 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共產黨 일당지배, 소비에트 권력, 지배계급의 특권의 보존을 유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스탈린체제는 너무 엄격해서 근본적인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을 가져오는 어떠한 변화에 대해서도 저항하였다. 1989년 이전의 東歐의 개혁주의운동은 공산당지배, 소비에트권력, 특권계급의 유지라는 핵심적 요소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부문적인 市場自由化 같은 제한적인 경제개혁을 지향하였다. 그러나 그간의 경제개혁이 대체로 실패로 돌아가자 1989년의 대변혁은 근본적인 경제개혁에 장애가되는 기존의 정치구조를 변혁하려는 體制變革운동으로 질적으로 轉化되었다.

셋째, 기존의 東歐 공산주의를 붕괴시킨 것은 東歐의 정치, 도덕적 분위기의 변화이다. 이 주제를 접근하는데 있어 정통성이라는 오래된 개념보다 더 좋은 개념은 없다. 일반적으로 政治理論에 의하면 체제변혁은 지식인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이 자신들이 정치·사회 체제체의 도덕적 타당성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하였을 때만 일어난다. 1940년대 중반에서 후반에 이르는 기간동안 공산주의는 東歐圈지역 그리고 공산주의가 무력에 의해 강요된 지역에서조차 적어도 지식인들과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상당수의 젊은 이상주의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정도의 正統性을 확보하고 있었다. 자본주의는 1930년대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던 것 같고 유럽의 자유민주주의는 히틀러를 저지하는데 무력하였으며 스탈린은 소련을 구한 지도자로 부각되었다. 마르크스-레닌이즘이 미래의 필연적인 진보의 물결이라는 주장이 그때까지 일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지는 못하였지만 실제로 동·서유럽 全域의 많은 지식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1950년대 초에 공산주의 국가에서 행하여졌던 억압과 테러는 일부 공산주의 추종자들의 회의를 불러 일으켰으나, 스탈린 사망 이후 改革은 가능해 보였다. 또 도시화와 산업화가 급속히 이루어졌고 현대의학과 교육의 혜택이 어느 정도 전체국민에게 확산되었다. 결정적인 轉換點이 된 것은 헝가리 革命이 분쇄되었

1830)는 면직과 방직의 시대이고, 두번째는 철도와 철강의 시대, 세번째(1870~1920)는 유기화학과 전기의 시대, 네번째(1920~1970)는 자동차시대이고, 현재는 컴퓨터와 생물공학의 시대라는 것이다. 소련이나 동구의 국가경제발전단계는 아직도 세번째 시대를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Ibid. p. 212.

던 1956년이 아니라 브레즈네프 정책의 의미가 명백해진 1968년 부터이다. 이 브레즈네프 정책의 의미는 곧 근본적인 정치改革을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간 이루어진 산업화는 어느정도의 經濟多元化를 가져왔고 이는 증가하고 있는 전문관료, 중간계급과 지식인들에게 政治的 多元化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갖게하여 주었다. 그것은 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자유경제에 대한 지향이며 나아가서 공산당 권력독점에 대한 위협이었다. "1968년의 프라하의 봄"은 이러한 열망이 정치적으로 표출되어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프라하의 봄"은 처절하게 분쇄되었고 그후 東歐의 지식인들은 공산주의의 장래에 대해 희망을 철회하였다. 즉 동구의 지식인과 일부 공산주의자들 스스로가 기존체제로서는 더이상 사회주의의 당초목표가 이룩될 수 없다는 신념상실이 동구의 몰락을 가져왔다.¹⁴⁾

그러나 이것만이 東歐의 大變革을 가져오게한 배경은 아니다. 삶의 전분야에 걸쳐 구조화된 과도한 관료제화도 총체적 불만을 야기시켰다. 스탈린주의의 강요는 소수의 恣意의 支配라고 하는 관료제화가 모든 수준에서 확대 재생산되었다. 頂上의 통지자를 頂點으로 모든 관료조직은 층층마다 자신의 편협한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는 小專制者들로 채워졌다. 頂上의 統治者는 자신에게 복종하는 부하관리들이 없는한 자신의 의지를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그는 부하들로부터 복종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자의적 권력의 과실들을 향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만 한다. 이러한 권력행사방식은 필연적으로 공산체제 全體의 부패구조를 內面化시켰다. 부패하고 부정직한 사회는 공정함, 평등, 진보등의 이념적 가치를 교육받은 도시인들에게는 쉽게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다 도시적이고 교육을 잘 받았으며 의식이깨인 새로운 노동자, 전문직업인, 지식인 등을 만들어낸 공산주의 성공 바로 그것이 공산체제와해의 잠재력으로 作用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동구 대변혁의 震源

1989년 동구大變革의 진원은 어디서 왔는가, 이에 대해서는 skilling이 50년~60년대 동구 개혁주의 운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제시한 설명모형¹⁵⁾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14) Timothy Garton Ash, The use of Adversity: Essays on the Fate of Central Europe (New York: Random House), 1989, p.61~70.

15) Gordon skilling, "scene and limits of liberalization in communist East-Europe" (remark at the panel discussion devoted to the change in communist bloc countries at the annual mee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New York, September, 1969). Andrezej Korbonski, "comparative liberalization processes in Eastern Europe," in J.Cohen and S.P.Shapiro(eds.) communist systems in comparative perspective (New York, 1974), p.50에서 재인용.

그에 의하면 동구개혁주의는 먼저 아래로 부터(사회)의 압력에 의해서 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중적인 압력과 이에 대한 집권층의 강경한 반발등에 의해 펼쳐지는 급격한 개혁을 수반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이때 주역은 지식인, 청년, 학생, 노동자들이며 이외에 간혹 농민이나 종교단체도 개혁의 진원이 되었다. 이들의 集團利益表出은 소극적일 수 있으나 때에 따라 이들 집단들은 서로 제휴하여 대규모의 개혁운동으로 전개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면 1989년의 진원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것은 동구공산주정권의 정치적 경직성과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해 1970년대이후 이들나라에서 서서히 사회 각 분야에서 진행되어온 자율적 사회의 형성이 체제變革의 진원이 되었다. 종교 역시 종파를 막론하고 공산체제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였다. 각 나라에서는 사회적 계층과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초월하여 지식인, 노동자, 성직자, 마르크스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 종교인, 민족주의자들이 인권과 민주화를 위하여 결합하였으며 이러한 결속은 權力獨占과 완전한 사회통제를 추구하는 공산권력에 저항하는 자율적이고 다원화된 사회를 強化하는데 기여했다. 이 자율적 사회가 공산정권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은 국민의 지지를 얻으며 代案의인 세력으로 급수상할 수 있었다. 폴란드의 자유노조, 헝가리의 민주포럼, 체코의 하벨을 중심으로하는 시민광장, 동독의 노이에스포럼등이 그것이다.¹⁶⁾

폴란드의 자율적 사회는 東歐의 어느 나라보다 조직적이고 강력하다. 우선 1970년대 중반까지는 지식인들의 정치적 주장과 노동자들의 物質的 요구가 분리되어 표출되었으나 1975년의 노동자봉기는 도동자와 지식인사이의 結束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카토릭교회도 이에 동조함으로써 권력에 대항하는 모든 사회세력간의 연대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권력과 사회전체와의 대결구조를 배경으로 해서 사회전체의 대표기구로서 정치적 대안을 제시하는 自由勞組가 결성되었다. 자유노조는 곧 불법화되지만 국민들은 계속 이를 자신들의 민주화투쟁의 상징으로 지원하였다. 폴란드에서는 결국 강화된 자율적 사회의 저항이 공산권력을 굴복시켜 체제變革을 이루는 震源地가 되었다.

헝가리의 경우는 1956년 헝가리 革命이후 공산당의 모든 정치적 독점권이 고수되었다. 권력행사에 있어서는 보다 유연한 방법을 사용하여 중앙명령식 경제체제를 완화시키는 경제改革을 실시하였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80년대 초 단행된 두번째 改革에서는 제2경제가 合法化되었다. 이와함께 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외채, 실업, 인플레이 등으로 경제적 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국가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사회의 이면에는 自律的 社會의 기능을 담당하는 실질적인 “제2의 사회”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세력들은 가부장적인 관료

16) 윤덕희, 前掲論文, p.16.

국가로 부터 자율적인 市民社會를 再形成하는데 기여했고 이것은 최근의 체제變革의 원동력이 되었다.

체코 공산당은 1968년 “프라하의 봄” 이후 국민들로부터 소외되어 왔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생활수준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적 불만을 中和시키리 수 있었다. 그러나 80년대의 경제적 침체, 이웃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화는 대중의 잠재적 불만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70년대초 부상한 반체제 단체인 77헌장조직과 70년대말부터 독자적인 사회세력을 형성해온 로마카토릭이 큰 역할을 하였다.

동독에서는 정권의 正統性이 취약하여 지난 30년간 그들의 정통성을 확립하는데 주력해 왔다. 경제적 팽창과 사회복지 정책을 실현했으며 동서독 분리정책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동독국민들의 서독국민에 대한 유대감을 재생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이에 是 이데올로기적 테두리를 벗어나 평화운동을 전개하였던 개신교회의 영향이 가장 두드러진다.

이와같은 아래로부터의 變化壓力에 대해서 동구국가들의 공산정권은 위로부터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이들은 이같은 상황에 부딪치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하여 일단은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식의 改革에 착안하였다. 그러나 50~60년대 개혁주의 운동실패이후 사실상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 시킬만한 정치엘리트는 무두 추출되었거나 처형당하였다. 1956년 헝가리의거에 있어서 改革운동의 기수였던 나지(Nagy)는 처형당하였고 같은해에 있었던 폴란드 노동자들의 자유화운동에 있어서 고물카(Gomulka)도 그 책임을 지고 축출되었다. 금세기 政治史에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회주의를 추구하였던 슬픈기록으로 남겨진 “1968년 프라하의 봄”에서 두브체크도 축출되었다. 따라서 위로부터 改革을 추진할만한 고르바초프같은 인물이 공산당내에 없다는 점이 오히려 국민들의 急進的인 改革과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폭발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이렇게 되자 권력과 사회와의 관계는 惡化되고 체제자체의 급격한 變革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정치체제에 의한 위로부터의 變革은 불가능하고 아래로부터 압력에 따라서 이 大變革의 방향이 결정되었다. 헝가리에서는 당내 改革파의 立地가 강화되었으며 폭넓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었다. 폴란드의 경우 자유노조가 의회에 진출하게 되었으며 이들 主導權下에 非共產聯立政府를 출범시킬 수 있었다. 동독에서는 민주체제수립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민중의 구호가 독일 통일로 확대되었고 그 결과 동독은 서독에 흡수 통합되었다. 체코에서도 대중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진출현상이 나타났으며 공산당의 권력독점, 마르크스-레닌주의 교육이념이 폐지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동구 대변혁의 자극은 “밖으로 부터” 도 주어졌다는 사실이다. 역사적으

로 보면 사회주의 宗主國인 소련이라는 변수가 종종 동구改革주의 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 1953년 3월 스탈린의 죽음은 동구개혁주의 운동에 새로운 활력소를 마련해준 사건이었다. 스탈린이 죽자 동베를린에서 노동자들의 폭동이 있었고 비슷한 사건이 체코와 폴란드에서도 터졌다. 이들 사건의 충격으로 헝가리에서는 나지주도하에 “신도선(new course)”이라 불리워지는 온건한 改革이 추진되었다. 더욱이 1950년대 중반 소련에서 발원한 스탈린 격하운동으로 인해 스탈린체제의 신화가 무너지자 50년대 동구제국에서 또다시 改革주의 파고가 높아졌다. 그것이 1956년 헝가리와 폴란드등지에서 일어났던 一連의 개혁주의 운동이다.¹⁷⁾

1989년 東歐의 대變革도 소련에서 고르바초프에 의해 주도된 페레스트로이카가 전환점이 되었다. 소련내부의 改革운동으로 시작한 페레스트로이카는 소련의 外交政策 특히 對東歐政策에도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것들中的 하나가 브레즈네프 독트린의 폐지이다. 이것은 동구개별국가의 改革운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1968년 이래 동구국가들에 대한 소련의 軍事介入을 합법화시킨 정책이다.

여기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역사에는 假定이 없다고 하지만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가 없어도 동구의 대변혁이 가능하였겠느냐하는 문제이다. 확실히 社會主義圈의 盟主였던 소련에서 페레스트로이카가 발원하지 않았다면 동구의 全地域에 만연한 경제적 위기, 공산주의의 도덕적 붕괴, 시민들의 불복종운동과 같은 現狀의 완만한 변화만으로는 1989년의 큰 물결을 이끌어 내는데 충분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동구 대변혁의 진원을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東歐의 대變革은 아래(사회)로부터의 변혁과 밖으로부터(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가 결합하여 초래한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변혁과정에서 위로부터(공산권력)의 대응은 거의 무력하였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1970년대 후반부터 동구의 각 나라에서 서서히 형성된 자율적인 사회가 온 국민의 지지를 받았으며 공산정권의 代案的 勢力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3. 동구 대변혁의 현황과 성격

1989년 이후 동구국가들의 변혁은 각나라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양하고 또한 혼란

17) 高忠錫, “동구공산주의체제의 변화와 성격”, 동구 공산주의의 이해, 제주문화, 1988, p.62.

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장래를 전망하기란 매우 힘들다. 그러나 체제전환이 비교적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헝가리와 폴란드같은 국가를 준거의 대상으로 할때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폴란드와 헝가리의 정치 및 경제 변혁에 초점을 맞추워 이들나라의 변혁의 현황과 전망을 조망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이를 통해서 여타의 동구국가들의 변혁문제도 해명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들 대부분의 서방학자들은 공산주의체제의 변화과정을 정치체(polity)와 사회(society)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시각에서 포착하여 일반론의 입장에서 논의하였다. 즉 多元主義로의 이행은 공산당의 경제통제를 점차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시작될 것이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공산당의 정치지배를 완화하게 된다는 명제이다.

초기의 공산주의 정권은 대체로 체제의 近代化(modernization)를 빠른 속도로 실현하기 위하여 이른바 "위로부터의 革命"을 강력히 추진하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써 전체주의적 動員體制를 구축한다. 이들 정권이 이 단계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發展目標은 경제의 근대화이며 대체로 소련의 경제발전 모형에 준거하여 기존 산업체의 국유화, 중공업 우선정책, 농업의 새로운 動力源의 발굴, 후진적 농민층으로부터 새로운 노동력의 강제적 창출 등을 강력히 추진한다. 이른바 "體制形成(system building)"期の 공산주의는 이러한 스탈린주의적 발전전략에 따라 근대화에 필요한 그리고 활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전체사회의 구석 구석에 그 힘을 펼친다. 이를 위하여 이들 정권은 이데올로기의 규범적 가치를 강조하고 조직적 개인적 충성심을 강요하며, 또한 강제력도 동원한다.¹⁸⁾

그러나 동원정권이 전체주의적 수단을 동원하여 의도했던 근대화에 한 걸음씩 접근하면 할 수록 그간 체제형성이라는 과업을 위하여 마련했던 통치위주의 정치구조의 역기능이 두드러진다. 이제 체제가 정치 아닌 "사회의 요구" 내지 경제요청에 따라 움직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즉 산업화 과정의 진행에 따라 경제적 복합성과 사회적 분화가 심화되며 이러한 새로운 상황 속에서 기존의 정치체제와 사회간의 단극적 재배관계는 오히려 계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피하기 어려운 장애요소로 등장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새로이 성장하는 경제 및 사회부문에 대한 계속적인 政治的獨占은 경제성장을 위해 요구되는 새싹을 크게 해치고 있음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공산주의의 정권은 사회의 새싹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제까지 동원을 위하여 필요했던 독점, 통제

18) Charlmers Johnson, "Comparing communist Nations", in C. Johnson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 1970), p.15ff.

기능 대신에 사회 내의 다양한 부문의 욕구와 이해관계를 적절히 표출할 수 있는 政治過程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점차 인정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능률과 합리성이라는 차원을 넘어 눈에 띄게 도전받기 시작한 體制의 正當性을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이다.¹⁹⁾ 특히 경제분야의 경우 이들 성숙한 공산주의체제가 추구하는 개혁조치는 다음과 같다.²⁰⁾

① 중공업에만 지나치게 역점을 두던 기존의 경제발전 정책을 바꿔 점차 경공업 내지 소비재 생활공산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한다. 이는 특히 일상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을 꾀하는 주민들의 사회적 욕구에 대한 반응책이다.

② 국민투자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생산의 專門化를 강조한다.

③ 시장경제적 요인을 점차 도입하기 시작한다. 그 예로 차별가격, 이윤성, 다양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경쟁성 등을 들 수 있다.

④ 기획과 집행의 분권화가 강조되고 일선 지배인의 재량권의 폭이 넓어진다.

⑤ 서구를 포함한 선진산업국가로부터 별다른 정치적 고려없이 테크놀러지와 자원을 도입하기 시작한다.

⑥ 특히 서방으로부터의 수입이 눈에 띄게 늘어난다. 이에 의하여 소비재의 국내유입이 증가되고 이는 국내산업체의 생활수준의 향상을 자극한다. 국내산업체도 두드러진 국가의 간섭없이 외국시장을 겨냥한 경쟁적인 재화생산에 나서기 시작한다.

이러한 경제분야의 변혁은 흔히 정치영역에 있어서의 변화를 동반한다. 거대한 경제관료체제의 권력은 점차 약화되고, 생산기술과 테크놀러지에 대한 당의 간섭은 점차 줄어들어다. 무엇보다도 體制管理期의 주역으로 테크노크라트의 등장도 두드러지기 시작한다. 分權化가 체제전반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며 서방과의 접촉이 늘어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약간의 개인적 자유가 허용되며, 대신 정치적 테러의 양이 줄어든다. 당·국가 관료체제의 엘리트층을 통하여 사회 내의 다양한 이익과 욕구가 표출되며, 이들 통하여 “機能의 多元化” 현상이 두드러진다. 경제체제의 활성화와 아울러 정치 및 사회발전의 씨앗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변화모형에 입각하여 1989년의 대변혁을 설명할 수 없을 것 같다. 동구의 대

19) Jack Bielasiak, "Lateral and Vertical Elite Differentiation in European communist States",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Spring/Summer, 1978), p.122.

20) Jran Volgyes, "The Impacts of Modernization on political Development", Charles Gati(ed.), The Politics of Moderization in Eastern Europe (New York, 1973), p.334 ~335.

변혁은 정치적 자유를 향한 도약으로 시작되었고 경제부문은 정치부문을 뒤따랐다. 정치적 변혁이 체제變革을 주도하였고 이것에 따라 경제의 다원화가 뒤따랐다.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변혁이 경제적 변화보다는 훨씬 용이하다는 것을 대변혁은 말하여 준다.²¹⁾ 따라서 1989년 이전에 동구의 여러나라에서 시도되었던 기존공산체제에 덜 위협적인 일종의 경제적 페레스트로이카는 근본적인 정치변화를 수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1989년 이후 동구국가들에서 전개되고 있는 정치 및 경제變革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라마다 시간의 완급과 내용의 강약은 있지만 정치적 다원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실현하고 있거나 그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상론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치변혁의 현황과 성격

政治的 多元主義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들나라의 정치변혁의 주요한 특징이다. 1989년 이후 東歐에서 진행중인 變革의 성격에 대해 意見과 論爭은 치열하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적 다원화로의 移行”이라는 데는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스탈린주의적 통치근간인 공산당1당 독재체제가 와해되고 多黨制가 도입되어 다원주의로 가고 있는 것만큼 분명해 보인다.

아직도 스탈린주의를 고수하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오늘날 동구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非共產勢力이 집권하였다. 이와같은 현상은 單極的인 하나의 큰 바위덩어리로 표상되던 체제가 상호교섭하는 다양한 사회적 諸勢力內的 관계로 이행되고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전환(system transformation)은 국가 권력과 개인사이에 복합적인 중간구조가 형성되고 다양한 종류의 사회관계로 이루어지는 시민사회의 재구성과정울 내포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나라들의 정치체제가 다원주의체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2가지의 先決課題를 고려해 봐야 하겠다.

우선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공산당의 지도력독점이 폐기됨에 따라 기존의 집권세력과 협력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엘리트집단의 출현이 시급하며 동시에 代案의인 制度의 창출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조건들을 잘 구비한 중부유럽의 나라들에서는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잘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렇지 못한 나라들에서는 루마니아처럼 內戰을 겪고도 체제전환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21) 高忠錫, “동구의 변화와 그 전망”, 제대신문(1989.11.13일자).

다음은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이 정치변혁을 비롯한 동구변혁의 앞날을 좌우할 것이다. 현재 東歐에서 위기에 처해있는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 市長經濟와 사기업을 폭넓게 도입하고 있고 이런과정에서 생산력의 현저한 감퇴, 대량실업, 높은 인플레이션, 물자부족 등의 사회불안 요인이 심각하게 돌출하고 있다. 또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엘리트와 새로운 엘리트사이에 마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것은 대중적인 불안을 조성할 수 있다. 예컨대 공적부문의 私有化過程에 있어서 과거의 특권층인 “노멘클라투라”가 새로운 부르조아지로 탈바꿈하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데 이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같은 불안요인들을 어떻게 극복하여 효율적인 시장경제체제를 착근시키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위의 2가지 선결과제가 순조롭게 해결되거나 해결될 전망을 보이지 못할 때 다원주의를 향한 정치變革은 좌초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양상레짐으로의 복귀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폴란드의 자유총선에서 연대노조의 지식인 그룹인 민중운동이 간발의 차이로 구공산당을 이겼는데 이는 순조로운 체제전환이 얼마나 힘든것이냐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하여 주는 실례이다.

2) 경제변혁의 현황과 성격

(1) 시장메카니즘의 광범위한 도입과 국제경제에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계획에 의한 사회주의 건설방식을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볼 때 이들 나라에 있어 초보적인 공업화를 관철시키는 단계에서는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 단계가 지나고 과학기술革命과 국내 우수노동력의 고갈현상이 도래하여 내포적 성장유형으로서의 이행이 과제로 등장하면서 스탈린주의적인 경제체제는 점차 비능률이 누적되고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²²⁾ 따라서 이들 나라에서 改革주의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비능률적인 경제를 어떻게 改革할 것인가가 논의의 주요대상이 되어왔고, 그 논의는 대체로 시장경제체제의 도입과 個別經濟 主體인 기업의 자율성 고양 및 국제경제 관계에의 참여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와 같이 市場化를 선호하는 이유는 시장경제가 계획보다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대와 ‘市場-計劃’을 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相互補完的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에 기초하여 오늘날 이들 나라에서는 처음의 기존 경제체제를 정비하고 계획에 시장을 접목한 혼합경제체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그 改革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

22) Branko Horvat, “The Typology of Contemporary socio-Economic systems and the trends of reforms”, Economic systems and reforms in a changing world,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주최 국제학술회의(1987.9), pp.17~19.

나 改革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계획과 시장을 어떤 비율로 결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나라마다 처한 특수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노정하고 있다. 오늘날 동유럽 국가들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폴란드는 생산력의 급속한 감퇴, 물자부족, 개발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증대, 실업의 증가, 외채의 급증, 무역수지의 적자 등 많은 문제를 갖고 있지만 체제 자체를 바꾸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市場化 改革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²³⁾

① 기존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의 포기에 따른 '위로부터의 동원방식'에 의한 사회주의 건설방식에서부터 경영메카니즘에 입각한 시장경제원리가 지배하는 분권화된 계획으로의 전환을 시도한다.

② 보조금 지급을 중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적자를 줄여나가고 도산을 인정하는 등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이윤의 극대화와 경영의 합리화를 꾀한다. 따라서 도산 기업의 수와 실업이 증대하고 있다.

③ 評價切下를 통해 같은 자국화폐의 실제가치를 인정함으로써 태환성부여에 대비하여, 자국 화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가격 체제의 안정을 꾀함과 동시에 수출입의 자유화와 수출 주도형 발전전략을 추진함으로써 물자의 부족을 메꾸고 아울러 인플레이션을 억제한다.

④ 상업은행의 신설과 대출 등 신용업무, 외화구좌 개설허가, 중소기업의 육성, 부가가치세, 누진세 등의 도입을 통해 조세제도의 改革 등 제반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시도한다.

⑤ 외국인 투자의 원활한 유치를 위한 법적, 제도적 보장과 자국 화폐의 태환성 등 과감한 대외개방정책을 수행한다.

결론적으로 폴란드의 경우는 기존의 계획체제 안에서의 단순한 새로운 제도 창출이라기 보다는 계획과 시장중에서 시장에 절대적 우위를 부여하는 시장경제체제로의 복귀라고 할 수 있다.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비슷한 경향의 改革노선을 추구하고 있거나 그렇게 될 전망이다.

(2) 生産手段의 소유에 대한 國有方式을 지양하고 私的 및 集團的 성격의 새로운 소유 형태를 모색하고 있다.²⁴⁾ 이와 관련하여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업의 사유화를 어느 선까

23) 이기영, 동구 경제적 현황과 개혁-폴란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소련·동구연구소 주최 학술회의, 서울 힐튼호텔(1990.4.20~21), p.14~15.

24) 高忠錫, 유고슬라비아 勞働者 自治管理制度와 組織權力 -人間的 社會主義를 위한 하나의 시도-, 서울, 법문사, 1991, pp.20~21.

지 밀고 나갈 것인가하는 문제이다. 폴란드의 경우 私有化 政策은 1989년 들어 이미 사적 소유가 80%에 달하는 농업분야에서부터 시도되었다. 앞으로의 사유화 작업도 사적 소유도가 높고 자본규모가 영세하고 고용인구가 비교적 적은 분야인 경공업, 수공업, 생필품, 식당 등과 같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가산업의 근간이 되는 대기업(기간산업)은 여기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헝가리도 현재로서는 중소기업의 고용상한선을 최대 5백명으로 정하고, 5백명 이하의 국영기업은 개인에게 매각이 완료되었다.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는 규모가 큰 국영기업을 누구에게 매각할 것이냐하는 것으로서 헝가리나 폴란드 국민의 대부분이 정부가 매각코자 하는 자산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 여력이 없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私有化 方法에는 3가지 代案이 검토되고 있다. 첫째는 국가소유로 되어 있는 공공재산의 상당부분을 각 지방정부로 이관시키면서, 동시에 정부가 근로자에게 기업의 소유권을 이양한 다음 기업경영의 수익금으로 정부에 대한 부채를 갚아나가는 종업원 지주제방식이다. 자금압박이 심할 경우에는 중앙과 지방정부, 상업은행 등이 주식일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 이 모델의 주요 요지이다.

둘째는 재산을 외국기업에 매각하는 방법이다. 이미 미국의 City Corp은행은 헝가리의 기업을 매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어 폴란드의 경우도 정부의 결정만 나면 언제든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 방법은 外國의 자본과 기술을 대폭적으로 끌어들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는 외국의 자본가와 국내생산업자가 공동으로 기업을 소유하는 合作方式이다. 이는 상당히 합리적인 방법으로 2차대전 이후 서독이나 일본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이 방식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을 위해 선진국의 앞선 기술과 자본을 끌어들이야 한다는 현실과 아울러 變革의 과정에서 국내의 新興 中産 엘리트 계층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4. 동구대변혁의 전망

독일 태생의 유태인 철학자 아렌트(Arendt)는 1951년 그의 저서 "전체주의 기원"에서 스탈린과 그 하수인들이 정치와 경제 뿐만 아니라 언론, 사법부, 여성단체, 청년조직, 낚사회까지 통제하는 영구집권의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탄식하였다. 그러나 1989년 동구의 대변혁을 보면서 아렌트의 예견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분명한 것은 이들 나라는 당분간은 마르크스-레닌-스탈린주의에 입각한 社會構成方式으로서의 공산주의 실

힘²⁵⁾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1989년 동구대변혁 이후의 모델로서 이들 나라에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 기초한 서구적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가 무리없이 수용될 수 있을 것인가. 이에는 여러가지 장애물들이 있고 이것을 극복하는데는 나라마다 편차가 있을 것이다. 동구대변혁의 방향이 脫社會主義의 方向인것 만큼은 확실하다. 그러나 東歐에서의 자본주의의 수용이 곧 서구적 민주주의로의 귀결을 의미한다고는 할 수 없다. 東歐諸國을 획일화하여 말할 수는 없지만 西歐의 民主主義가 동구의 새로운 체제로 수용하는데는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힘든 이유가 있다. 오랜 세월동안 뿌리 박혀있는 東歐人들의 평등주의적 의식, 자유주의적인 정치전통보다는 國家主義的 傳統이 강한 점, 시장경제를 이끌어 갈만한 전문 경영인, 정책결정자들의 결핍을 그 이유로서 지적할 수 있다.

아무튼 동구국가들의 發展模型 탐색은 다음과 같은 준거틀의 범위내에서 이루어 질 것이다. 개인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로 평가되어야 하며, 사회가 그 구성원들의 私的인 일들에 대한 개입은 어느 정도까지 제한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하면 국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 수 있는가. 아니면 地方的이거나 사적이고 개인적인 利害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이 어느정도까지 제한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사유재산과 공개적 시장은 육성되어야 하는가, 제한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궁극적으로 근절되어야 하는가. 근대적, 산업적 사회의 성과들을 수행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목표였는가? 하는 등의 문제이다.

따라서 동구국가들은 이와같은 준거개념에 입각하여 자신들의 국가발전모형을 창출해 나갈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극단적 민족주의, 종교적 환상주의, 서구에 의해 전세계에 확산된 합리적, 자유주의적, 회의주의적 계몽사상에 대한 격렬한 적대감이 사회주의의 붕괴로 인해 생긴 공백을 메울지도 모른다.

어디로 갈 것인가. 현 시점에서 보건데 동구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할지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오늘날 이들 나라들이 교과서에도 없는 변화를 전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델이 될만한 체제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데 있다. 따라서 이들 나라들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한번도 실험한적이 없는 새로운 발전모형을 창출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變革의 내용은 그러한 모형을 창출하기 위한 작업의 시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어떠한 정치 및 경제질서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제도화될지는 궁극적으로는 그 나라

25) 즈비그뉴 브르제진스키(영순희 譯), 大失敗, 서울, 울유문화사, 1989.

민중들의 의지와 능력에 달려있다.

Ⅲ. 소련 체제의 변화와 전망

1. 서 론

고르바초프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페레스트로이카는 영어의 'Re-structure'에 해당하는 말로서 소비에트 체제의 전반적 개혁과 재편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은 종래의 개혁정책과는 달리 기존체제의 근본질서에 대해서 메스틀 가함으로써 혁명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으며 국가가 스스로 체제개혁의 주도적 역할을 떠맡았다는 점에서 가히 위로부터의 혁명이라 말할 수 있다. 페레스트로이카에 의한 소비에트체제의 획기적인 방향전환은 20세기를 마감하고 있는 세계사로 하여금 엄청난 지각 변동을 경험하도록 만들고 있으며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역시 그 변화를 피부로 실감하고 있다.

전통적인 소비에트 체제의 비능률과 이념적 낙후는 경제적 침체와 비민주적 사회질서를 초래하였으며 이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위기상황을 초래하였다. 고르바초프에 의해 강력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그것은 점차 다수 국민에 의하여 추진력을 획득하게 되었다. 페레스트로이카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고르바초프 개인의 역할이 과소평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역사의 필연이며 사회주의체제에 있어서 개혁의 시도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역사의 대세가 되었다.

문제제기와 진단은 곧 처방으로 이어졌다. 경제적 침체와 비민주적 사회질서의 주요원인이 중앙통제경제의 폐해와 공산당의 관료주의로 밝혀짐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강도 높은 처방들이 계속적으로 강구되었으며 급기야 상황은 페레스트로이카에 의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변질을 경고하는 위험수위에 이르게 되었다.

경제개혁과 민주화를 페레스트로이카가 추구하는 두개의 중요한 목표이자 실질적 내용이라 할 때 이를 위하여 취해진 파격적인 조치들을 살펴보면, 전자와 관련하여 소련은 본격적인 시장제도 도입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되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장경제가 사회주의와 양립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소련은 전통적인 자본주의 경제원리들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를 행하고 있으며 - 개인노동에 대한 새로운 평가,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물질적 동기부여, 기업의 자주적 권한과 책임의 확대 등. 그러한 시도는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다. 후자와 관련하여 전통적인 공산당의 지위와 역할을 부정

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 졌다. 당정분리원칙에 입각한 정부주도하의 국정운영은 당의 권한을 약화시켰으며 당관료제급의 특권폐지는 물론 당의 지도적 역할, 당의 운영원리로서 민주집중제의 원칙 등이 폐기되거나 대폭 수정되었다. 새로운 선거법은 복수후보에 대한 비밀투표를 허용하였으며 심지어는 복수정당제를 거론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식 대통령제의 도입 역시 지나치게 비대해진 당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데 한 이유가 있다.

91년 8월의 소련사태로 인하여 소련의 체제개혁은 일용 아래로부터의 혁명의 계기를 맞게 되었으며 페레스트로이카는 보다 급진화되어 포스트-페레스트로이카의 시대를 거론하기에 이르렀다.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가 전통적인 레닌주의를 포기하면서도 최소한의 사회주의질서를 유지하려 했다면 소련사태이후의 변화는 페레스트로이카 과정속에 내재해 있는 사회주의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는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글은 우선 페레스트로이카의 이념적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몇개의 견해를 검토한 후, 페레스트로이카의 성과가능성과 관련하여 몇몇 중요한 이슈들을 고찰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소련사태 이후의 변화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2. 페레스트로이카의 이념적 성격²⁶⁾

소련에서 진행중인 페레스트로이카의 경우 동구에서의 사회주의 체제붕괴와는 달리 격심한 혼란속에서도 일련의 실험이 아직 완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우선 지적해야 할 것이다. 시간의 추이에 따른 전개 양상의 변화도 발견되어 진다. 또한 관찰자의 이념에 따라 분석내용이 달라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페레스트로이카의 본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페레스트로이카를 사회주의의 붕괴 혹은 자본주의로의 회귀라는 시각에서 파악하는 비교적 단순화된 논리가 존재한다. 아이러니컬 한것은 이러한 시각이 강경한 마르크스주의자와 서구의 보수적인 반공주의자 양측 모두에 의해서 견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련내의 일부 보수세력과 몇개의 사회주의국가, 그리고 전통마르크스주의와 불세비즘의 전통에 대해 향수를 느끼는 서구사회의 경직된 좌파지식인이 바라보는 페레스트로이카

26) 페레스트로이카의 이념적 성격에 대한 논의는 8월 쿠데타 이전의 시기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그 이유는 8월 사태 이후의 변화는 가히 양으로부터의 질로의 전환이라 말할 수 있어서 이전의 논의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쿠데타이후의 변화는 별개로 고찰한다.

는 사회주의원칙의 포기이며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배신행위로 파악된다. 이러한 입장에 의할 때 특히 공산당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일련의 조치와 시장경제의 도입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본다. 동일한 맥락에서 행해진 어느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고향인 독일에서 카우츠키와 베른슈타인에 의해서 마르크스주의가 배신되고 오히려 러시아에서 레닌에 의해 혁명의 순결성이 지켜졌던 것처럼, 지금 레닌의 고향 소련에서 고르바초프에 의해 마르크스 - 레닌주의가 배신되어지고 제3의 장소로 그 과제가 옮겨지고 있다.

정반대로 서구의 보수주의 진영이 파악하는 소련의 변화는 본질적으로 동구사태와 크게 다를 것이 없으며 한마디로 사회주의의 실패 그 이상의 것이 아니다. 「장엄한 실패」의 저자 브레진스키는 책제목이 암시하듯이 1917년 이후 볼셰비키체제의 등장과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를 포함하여 최근의 동구공산주의체제의 파국을 20세기 세계사에 있어서 가장 큰 드라마였다고 말하고 있다.²⁷⁾

위기의식속에서 페레스트로이카에 의한 체제의 변질에 저항하는 강경마르크스주의자의 시각이나 현금의 사태를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로 보는 서구보수주의 진영의 시각이나 사태의 진단에 있어서 사실상 동일하다. 다만 반응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한편은 이를 저지하려 하고 있고 다른 한편은 승리감속에서 이를 수용하고 있다는 차이이다.

가장 일반화된 사회주의 진영의 논리는 진정한 사회주의론 혹은 사회주의 강화론의 논리이다. 고르바초프자신도 공식적으로는 이러한 입장에서 서 있다. 이에 따르면 페레스트로이카에 의해 야기되는 일련의 변화는 왜곡된 사회주의 - 스탈린주의 - 의 잔재를 청산하고 진정한 사회주의 이념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이며 이는 과도기적인 사회주의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주의의 토대를 강화시켜줄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페레스트로이카의 이념적 의미는 스탈주의 비판과 진정한 사회주의 이념으로서 레닌주의에로의 복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논의될 수 있다.

우선 스탈린주의 청산의 논리를 살펴보자. 이에 따르면 페레스트로이카가 추구하는 민주화와 경제발전의 커다란 장애물로서 당의 관료주의와 중앙통제경제의 폐해는 스탈린시대에 와서 성립된 왜곡된 사회주의의 산물이다.

스탈린의 권력자원으로서 당의 관료집단은 스탈린의 권력강화와 더불어 새로운 계급으로 부상하여 모든 권리를 독점하고 인민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되었다. 당의 의사는 선형적으로 무오류임이 주장되었고 토론과 비판의 자유가 사라졌다. 반대세력에 대한 조직적

27) Zbigniew Brezezinski, 대실패, 명순희역(서울: 율유문화사, 1989), p.22.

인 테러가 자행되고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가 박탈되었다.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이름으로 당의 독재가 행해졌고 이것은 지도자 일인의 독재로 귀착되었다. 스탈린의 독재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부집단에 대해서는 신분상승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스탈린은 사라졌지만 이들 지배집단은 오늘날까지 존속하여 권위주의와 비능률, 부패의 온상이 되었다. 브레즈네프세대는 스탈린체제의 살아있는 유산이 되었다.

고르바초프는 이들 보수적 아파라치키세력과 맞서 민주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복수후보제와 비밀투표를 도입하여 당의 체질을 혁신시키려하고 있다. 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지고 시민의 정치적 자유가 신장되어 이들 바탕으로한 인민의 정치참여와 소비에트의 활성화가 시도되고 있다.

다른 한편 스탈린주의의 또하나 내용으로서 획일적인 중앙통제경제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진다. 1920년대 볼셰비키의 경제정책은 시장제도의 수용문제에 대하여 대단히 유연한 태도를 취하였으며 레닌의 결정에 의하여 신경제정책이 채택되었을 때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시장의 원리와 계획경제의 변증법적 통일을 모색하였다. 권력장악초기 스탈린은 조심스럽게 시장경제원리와 농업경제의 활성화를 강조하는 신경제정책추진세력에 동조하여 정적 트로츠키와의 권력투쟁에 이들 심분 이용하였다. 그러나 신경제정책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냈을 때 결국 그는 신경제정책의 포기를 선언하고 극단적인 중앙통제경제정책을 채택하여 공업화전략과 농업집단지화 전략을 추진하였다. 1928년 소련은 제1차 5개년경제개발계획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중공업 우선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시기 스탈린 정권은 곡물인도를 거부하거나 집단 농장에 들어가기를 꺼리는 모든 농민들을 소비에트의 적으로 몰아 일종의 전쟁을 수행하였으며 사실상의 현대판 노예제라 할 수 있는 수많은 강제수용소를 만들어 내었다. 사회주의경제의 원형으로서 스탈린의 중앙통제경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외연적 성장의 한계를 노정시켰으며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는 비능률과 관료주의, 생산성의 저하, 산업구조의 구조를 왜곡화를 초래하여 소련경제를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도록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관료주의문화의 청산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처방으로서 경제정책의 일대전환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진정한 사회주의론은 레닌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며 특히 후기레닌의 사상을 강조한다. 고르바초프는 기업의 자율성과 노동의 인센티브를 크게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새로운 경제정책이 전적으로 레닌의 전통에 입각해 있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전적으로 레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년의 레닌의 사상을 보다 중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다.²⁸⁾ 후기레닌주의에 대한 강조는 레닌의 신경제정책을 우선적으로 거론한다. 혁명후 제국주의의 압력과 내전의 상황속에서 시도된 전시공산주의는 대다수 국민의 불만을 유발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제위기를 초래하였고 신생소비에트체제의 존립자체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크론슈타트수병의 반란이후 레닌은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였다. 혁명의 이상이 현실속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을 때 이념은 보다 온건해졌고 원칙의 문제는 대폭 완화되었다. 레닌은 1921년 농촌경제의 황폐화를 막기 위하여 부농에 대한 공격을 중지하였으며 비마르크스적인 시장경제의 원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다. 신경제정책의 도입에 따라 정치·사회·문화 등 여타 영역에서도 자유주의조치가 취해졌으며 이 시기 레닌은 체제정비를 위한 휴식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제급투쟁의 교리를 크게 후퇴시켰다. 또한 레닌은 당의 관료주의화 경향에 대해서 말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관건이 관료주의 극복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스탈린의 독선을 경계하였으며 스탈린이 서기국을 장악하여 자신의 개인적 지위를 구축하는 방식에 대해 경악하였다. 그의 유서는 스탈린보다 덜 위험한 인물이 자신의 지위를 계승해야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진정한 사회주의론은 페레스트로이카가 당내민주주의에 대한 레닌주의로의 완전한 복귀이며 당의 재건을 논하기 위하여 레닌의 최후의 저작들에 나오는 그의 이념과 사상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²⁹⁾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제3의 해석은 오늘의 소련사회가 겪는 변화를 동서체제의 상호수렴과정의 일부로 파악하는 입장이다.³⁰⁾ 수렴의 귀결점은 혼합체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페레스트로이카가 주장하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재원칙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다름이 없으며 사회적 시장경제 역시 시장경제의 점진적 도입을 의미할 뿐이다. 세계사의 새로운 변화는 사회주의가 서구식 민주주의, 자본주의원리와 접목되어가는 과정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그것에 어떠한 이점을 붙이느냐 하는 문제는 수사학의 문제에 불과하다. 자본주의체제의 변화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수렴론적 해석과 진정한 사회주의론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바탕

28) M. 고르바초프 페레스트로이카, 이봉철역(서울:증원문화, 1988), p.24.

29) C. 라주몹스키, "당민주화에 관하여," 사상문예운동, 사회주의 대개혁의 논리, (서울:풀빛, 1990), p.237.

30) 수렴론에는 낙관적 수렴론과 비관적 수렴론이 있으며 전자는 베버주의적 합리성의 승리를 강조하는 반면 후자는 후기베버주의적 전체주의를 강조한다. A.G.Meyer, "Theory of Convergence," in C. Johnson(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Stanford Univ. Press, 1970), p.328. 여기서는 전자를 지칭한다.

으로하고 있다. 수렴론은 사회주의체제의 이념적 종착역을 서구적 의미의 사회민주주의 어느 한 지점으로 파악하는 반면 진정한 사회주의론은 사회민주주의의 가치를 인정은 하지만 사회주의로부터의 어떠한 후퇴도 인정하지 않으려한다. 그것이 지향하는 이데올로기는 사회민주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사회주의'이다.

페레스트로이카의 이념적 본질을 둘러싼 다양한 해석을 놓고 소련사태 이전의 상황에서 필자가 취하는 입장은 마지막의 수렴론의 입장이다. 그 이유는 첫째 사회주의 붕괴론은 아직으로서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볼셰비키혁명의 근원지로서 소련의 경우 동구사회주의국가와 상황이 다르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두번째의 진정한 사회주의론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 사회주의 현실의 모든 문제를 스탈린체제의 결과로 책임을 전가시킴으로써 고전적 사회주의 이론속에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³¹⁾ 가령 스탈린의 억압정치가 부분적으로 스탈린의 경제정책에 기인하고 있으며 계획경제를 볼셰비즘의 전통이라고 보았을 때 스탈린체제의 상당부분은 스탈린개인의 과오라기 보다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상존하고 있는 위협이라 말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단일정당체제를 고집하고 대중에 대한 당의 지도적 역할을 강조하며 민주집중제의 원리를 통하여 권위주의적 당운영의 전통을 수립한 볼셰비키의 전통이야말로 스탈린 일인독재와 관료주의의 정치적 기초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사회주의론의 또 하나의 명제인 진정한 레닌주의로의 복귀 역시 후기의 레닌과 그의 정치현실주의를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레닌이론의 일면적 특징을 전체로 포장하는 경향이 있으며 레닌주의를 무원칙한 사상체제로 만드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레닌은 결코 스탈린식의 관료독재를 원하지 않았지만 그의 이상은 다양성과, 관용, 자유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서구식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으며 그는 과도기적 체제로서 프롤레타리아 중앙집권주의를 강조하였고 당의 절대적 지위에 대하여 결코 신념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 신경계정책을 통하여 잠정적 조치로서 시장경제의 부분적인 수용을 결정하였지만 레닌을 시장경제의 지지자라고 말할 수는 없다. 레닌을 포함한 초기 볼셰비키들의 계획경제에 대한 믿음은 확고한 것이었다. 페레스트로이카가 주장하는 혁신적 재구성은 레닌의 이름을 빌어 사실상 레닌주의의 핵심원리를 파괴시켜 버리고 있다고 보여지

31) 스탈린주의의 본질이 사실상 볼셰비즘의 전통에서 연유하고 있다는 생각은 오랫동안 학자들에 의해서 컨센서스를 형성해 왔다. S.코헨, "볼셰비즘과 스탈린리즘", 로버트 터커, 스탈린리즘, 김광삼역(서울: 문화예술사, 1982), p.198.

며 우리 정부를 포함한 서방국가들의 코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할 것이다.

진정한 레닌주의론이 또 다른 표현이 되고 있는 사회주의 강화론은 계획부문이 시장부문보다 우위에 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논리이다. 변화의 종착지가 어디가 될 것인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며 오직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지만 필자는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의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그것은 조만간 사회주의 강화론이 설정하는 계획과 시장비율의 경계선을 통과해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페레스트로이카를 사회주의 발전에 있어서 과도기적인 단계로 파악하는 논리에 대해서도 과도기의 기간설정이 자의적이라는 점, 과도기가 체제의 본질적인 변화를 허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 등 때문에 공감할 하기 어렵다.³²⁾ 따라서 필자는 페레스트로이카의 이념적 성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진정한 사회주의의 논리가 아닌 사회주의 수정의 논리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페레스트로이카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결합시킨 혼합체로서 제3의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고 보았다.

3. 페레스트로이카의 성패 요건

페레스트로이카의 이념적 성격에 관한 논의와는 별개로 페레스트로이카가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존재차원의 문제를 검토해 보자. 페레스트로이카의 이념적 본질에 대한 논의와는 달리 그것의 성패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대단히 시사적일 수 밖에 없으며 시간은 항상 사회과학자들을 망신시켜왔다고 경제학자 갈브레이드가 이야기하였듯이 소련의 장래를 예측한다하는 것은 필자로서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이 주제에 관해서는 페레스트로이카의 성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수 세가지—경제개혁, 권력투쟁, 민족분규—를 선택하여 각 변수에 대한 사태의 대립적 경향만을 기술하려 한다.

32) 명확한 개념정의에 실패하거나 이를 회피함으로써 모든상황에 부합될 수 있게 이론의 논리적 전천후화를 꾀하는 전략을 애드혹크(adhoc)의 전략 혹은 규약주의의 책략(conventionalistic stratagem)이라고 한다. 이런 경우에 이론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박이 불가능하다. K. Popper, *The Logic of Scientific Discovery*, pp.78~84.
라카토스에 의하면 이론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재해석이란—핵심원리(hardcore) 이론의 폐기와 다름이 없다. I. Lakatos, "Falsification and 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mes," in *Criticism and The Growth of Knowledge*, (ed.), I. Lakatos and A. Musgrave (Cambridge Univ. Press, 1976), pp.91~189.

1) 경제개혁의 문제

어느 사회에서나 마찬가지로이지만 소련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민생문제 해결이며 페레스트로이카의 성패는 우선적으로 소련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소련은 지난해 국민총생산이 89년 대비 2% 줄었고 공업생산과 농업생산이 각각 1.2%와 2.3%, 대외교역은 6.9% 감소하였으며 1백억 루블에 이르는 무역적자를 기록하였다. 소련 정부는 올해 국민소득의 15~20% 저하를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지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만성적인 식량, 생필품 부족과 이에 따른 매점, 매석행위, 물가인상조치에 따른 고인플레이션상, 관료들의 부패, 사경제에 편승하여 돈을 번 사람들과 일반시민의 위화감, 고르바초프정부가 추진해 온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실망등이 위험수위에 와 있으며 이로 인한 국민의 불만은 각종 시위와 파업의 형태로 폭발되고 있다.³³⁾ 경제사정이 악화됨으로써 사회전반에 걸쳐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고 이것이 소련사회의 결속을 해치고 있다. 소련경제의 곤경은 금년에 들어 위기상황이라고 까지 일컬어지게 되었다.

고르바초프대통령은 악화되고 있는 소련경제위기 타개책으로 정치적 파업의 증지를 촉구하는 동시에 시장경제체제로의 조속한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소련최고회의가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계획을 승인한 후 본격적으로 취해지고 있는 일련의 조치는 92년 10월 1일까지 자유시장가격체제로의 전환을 완료하고, 금년 2·4분기중 민영화계획에 의거 적자경영회사를 민영화시키며 책임경영진을 해고하고, 금년중 국가대외무역기구의 독점체제를 종식시키고 대외업무를 분산시킨다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련정부는 금년 3월 시장경제로의 첫단계 조치로 가격개혁을 단행하였다.

소련은 지금까지 소매물가 산정을 생산비용과 관계없이 정책목표에 의해 결정해 왔으며 정부는 소비재의 소매가격을 정책적으로 낮게 책정함으로써 이로 인한 생산자의 손실을 국가예산에서 지출되는 보조금으로 보전해 왔다. 새로운 조치는 소매가를 생산원가에 접근시킴으로서 기존가격체제하에서 야기되었던 생산의욕의 저하와 생산의 감소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소련 정부는 이번의 가격개혁조치로 인한 물가인상과 국민의 부담을, 가격인상에 따른 추가수입의 노동자에 대한 복리후생비 지출증대로서 경감시키려 하고 있다.

소련이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상반된 평가가 행해지고

33) 이는 네프맨(Nepman)의 등장으로 인한 위화감, 가격기구의 교란 등 1920년대 신경제정책이 실패에 이르는 과정과 유사한 상황이라 말할 수 있다. 신경제정책의 후유증에 대해서는 E.H.Carr, 러시아 혁명(나남, 1983), pp.59~68 참조.

있다. 낙관적 시각은 현재의 소련경제를 증독상태가 장기화되었던 환자의 치유에 비유한다. 환자가 정상을 되찾기 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제반위기는 죽어가는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치유과정에서 나타나는 증후로 보아야 한다. 현위기는 심각하지만 절망적이지는 않다. 이러한 견해는 무엇보다도 소련의 풍부한 자연자원과 금과 외화보유, 높은 교육수준과 훈련이 잘된 노동력, 고급기술의 존재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아쉬운 것은 소련의 관료계급이 경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말은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며, 가령 최근에 실시된 가격개혁조치는 소련 관료주의의 전형적인 예로 파악하고 있다. 시장경제를 추진하면서 이루어진 가격개혁 조치가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 하달된 가격이라는 사실은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의식의 전환을 위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비관적 시각은 페레스트로이카 6년의 성과가 무엇인가 의문을 제기한다. 참을성을 갖고 기다려온 소련국민의기대는 무산되고 있다. 혼란과 분열, 이기주의만이 팽배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의 물가인상조치는 품목에 따라서 몇 백%, 생활품의 경우 60%가격인상을 초래하여 보상조치에도 불가하고 일반시민들은 고통스러운 충격을 받아야만 하게 되었다. 특히 보수세력들은 급격한 시장경제의 채택이 산업생산의 감소와 대량실업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생활품공급이 여전히 순조롭지 않을 때 그리고 가격인상으로 생활수준이 더욱 낮아짐을 의식하게 될 근로의욕은 감퇴할 것이고 억눌려왔던 불만이 더욱 증폭되어 폭발될 가능성이 있다.

2) 권력투쟁의 문제

페레스트로이카의 성패는 고르바초프 개인의 정치적 운명과 직결되어 있으며, 이는 또한 거대한 사회개혁의 물결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수와 혁신 양대 정치세력간의 권력투쟁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페레스트로이카를 거부하는 군, 당료, 보안기구 등 보수세력과 보다 철저한 개혁을 요구하는 엘친지도하의 급진세력사이에서 고르바초프는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으며 어떤의미에서는 사려깊은 균형자의 역할을 필사적으로 행하고 있다.³⁴⁾ 고르바초프는 지난 10개월간 보수파와의 타협으로 구축된 기반위에서 최근 엘친을 비롯한 급진개혁파를 포용하는 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34) 고르바초프의 노선은 중도적이며 끊임없는 절충의 시도를 그 본질로 하고 있다. 의견상 태도는 사회주의의 우위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는 서구체제에 접근하고 있다. 엘친은 고르바초프에 대하여 절충만으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David Lane, *Soviet Society under Perestroika* (Boston : Unwin Hyman, 1990), pp.350 ~351.

좌우로 부터 협공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고르바초프에 대한 보다 심각한 위협은 보수파로부터의 도전이라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여론에 호소하는 급진파들의 공세와는 달리 이들이 군부와 공산당, 국가보안위원회 등 막강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소련의 행정력과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과 또한 이들의 도전은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를 반대하는 보다 근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소련인민대표대회내의 대표적인 강경보수파 단체인 소유즈그룹(빅토르알크스니스라는 40대 현역공군 대령이 지도자중의 한사람인 300여명 규모의 그룹)은 현 위기의 수습을 위한 국가 비상사태선포를 촉구하고 고르바초프 재임중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특별회의의 소집을 요구한바 있다. 대체적으로 소련 파워 엘리트 그룹의 다수를 이들 보수파가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안보회의(KGB) 의장인 보수파의 블라디미르 크류츠코프가 고르바초프를 대신할 제2인자로 관측되어 진 바 있다. 그러나 보수파에 의한 과거 후루시초프축출식의 중정반란의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거와 달리 서기장선출이 당중앙위원회가 아닌 당대회 전체 대의원들 직접비밀투표, 복수경선제에 의하게 되어 있고 고르바초프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당·정분리정책에 의해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된 반면 당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됨으로써 보수파의 고르바초프에 대한 도전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은 이번 28차 당대회결과 고르바초프의 서기장연임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에 비해 급진파의 도전은 위로부터의 혁명의 연장으로서 아래로부터의 혁명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최근의 광원들의 대규모파업과 경제난에 항의하는 시위자들의 구호는 점차 고르바초프 퇴진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됨으로서 강경파의 독세가 상대적으로 개혁주의진영에 재난을 가져올 것을 우려하여 엘친이 이끄는 급진개혁파는 고르바초프와 협력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급진파 지도자 엘친은 기본적으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의 성과의 일단을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더욱 급진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입장이므로 보수파의 경우와는 달리 페레스트로이카의 기본방향에 커다란 시각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정치적 혼란과 무정부상태가 결과적으로 보수파에게 반격의 기회를 제공하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고르바초프의 퇴진이 그들에게 더 악화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현실 인식속에서 극단적인 파국상황을 연출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또한 고르바초프의 라이벌로서 엘친의 대중적 인기가 얼마나 지속될것이지, 혹은 실제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지도자로서 그의 실제능력이 어느정도인지도 미지수이다. 최근의 몇몇 사태를 통해 보여준 엘친과 고르바초프의 힘겨루기는 대체적으로 무승부였다고 외신은 평가하고 있으며 급

년 초 소련을 방문했던 너슨 전미국대통령은 고르바초프와 옐친의 완전한화합은 불가능하지만 당분간 옐친은 고르바초프와 평화적인 경쟁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보았다. 초근 보리스 옐친과 고르바초프는 공동선언을 통하여 신 연방조약체결을 가능한 한 빨리 체결할 것과 소련대통령의 직선제에 합의함으로써 고르바초프와 급진세력간의 충돌로 빚어진 소련의 정치위기는 호전의 기미를 보여주었다.

보수 개혁을 불문하고 고르바초프를 대체할 마땅한 인물이 없는 상황에서 두 세력간의 균형을 잡아주고 있는 조정자로서 그의 역할을 고려한다면 조기퇴진 내지 실권가능성에 대한 끊임없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고르바초프의 정치적 위치는 당분간은 안전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긴장상황이 계속되어질 때 그의 정치적 장래는 점차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며, 고르바초프의 퇴진은 이의로 빨리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극단적인 관측의 예로서, 최근 미국의 체니국방장관을 비롯한 서방관측자들의 발언은 극적인 변화를 성취하지 못할 경우 고르바초프가 올해안에 실각할 수 있음을 전망하고 있다. 소련과의 협상에 임하는 일본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유보적 태도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할 것이다.

3) 민족문제

오늘의 소련을 위기로 몰아놓고 페레스트로이카의 장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변수로 민족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130여 민족과 15개의 공화국으로 구성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발트3국을 비롯한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몰다비아 등 소수민족국가들이 잇달아 주권선언과 탈소독립을 선언함으로써 소련은 연방해체의 위기를 거론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소련은 금년 3·17일 연방존속여부를 놓고 최초의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고르바초프는 집권이후 최대의 시련을 맞게 되었다.

1990년 12월 소련정부는 발틱 3국을 포함한 주요민족분규지역에 대해서 비상사태선포를 실시할 것을 경고하고 향후 비러시아계 민족들의 민족분규 및 탈소 독립운동에 대한 연방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을 3천명한 바 있다. 1991년 1월 중순 소련정부는 분리주의 운동이 격화되고 있는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공화국에 정부군을 투입하여 주요시설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유혈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는 발트3국의 탈소 분리주의 움직임에 쇄기를 박으려는 정부내 보수세력과 소련 군부의 강공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러시아와 인종, 언어 문화적 전통을 달리하는 이들 민족은 18세기에 러시아에 복속된 이래 한때 독립을 경험하기도 하였으나 1939년 독일과 소련의 비밀협정에 의해 다시 소련 연방에 편입된 후 자치독립의 요구가 한동안 묵살되었다. 그러나 1985년 고르바초프가 집권하면서 비러시아계 민족운동은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된다.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는 그 동안 억

늘려 왔던 소수 민족의 폭발적인 욕구분출을 야기시켜 이들 국가들은 민족자치권의 확대의 차원을 넘어 탈소 분리독립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³⁵⁾

이들 국가는 새로운 공화국헌법을 채택하여 독립된 주권국가임을 선포하였고 연방정부는 이를 즉각 무효로 선언하였다. 그리고 이를 따라 여타의 공화국들이 같은 입장을 천명했을 때 고르바초프는 무력진압에 뒤이어 마지막 카드로서 연방제도 존속여부를 놓고 고르바초프정부에 대한 신임투표의 성격을 띤 국민투표를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금년 3월 17일 연방제도의 존속을 묻는 국민투표에서 6개공화국의 국민투표거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지지를 확보하여 소련은 위기를 일단 모면하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연방정부의 본래 제안에 약간의 수정이 이루어졌는데 예를들어 우크라이나 공화국은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연방이라는 용어대신 주권공화국동맹이라는 용어로 바꾸어서, 러시아공화국의 경우 독자적으로 대통령직선제 도입의 설문을 추가하여 국민투표가 이루어졌다. 3·17일 국민투표에 의해 채택된 새연방조약안은 각 공화국의 연방으로부터 탈퇴를 형식적으로 허용하면서도 수 많은 제한 규정을 뒀음으로써 사실상 탈퇴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또한 각 공화국을 주권국가로 인정하면서도 주요권한을 연방에 이양시키고 있는 조항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발트 3국외에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몰다비아공화국이 계속 거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9개 공화국 지도자들은 내정불간섭조항을 추가하고 중앙집권체제를 상당히 불식시킨 체제를 새로운 연방제의 형태로서 설정하여 합의를 모색중이다.

연방정부의 강경대응에도 불구하고 이들 공화국의 분리독립의 움직임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아직으로서는 소련의 민족분규에 묘안이 없는 상태이며 소련정부의 강경대응에 대한 서구여론의 비판의 목소리도 매우 드높다. 미국은 이들 발트연안 국가가 40년대 소련에 합병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을 법률상 독립국가로 인정하여 공사관계를 유지해 왔다. 소련과 마찬가지로 다민족연방국가인 유고슬라비아의 경우에는 연방해체나 느슨한 주권공화국의 연합이나라고 하는 비슷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민족문제를 둘러싼 소련의 내분을 살펴보면 연방주의와 분리주의가 보수와 진보의 구분

35) 소련을 지배하고 있는 민족은 러시아, 백러시아, 우크라이나로 구성되는 슬라브족이며 연방정부의 중요 관직은 이들 민족에 의해 독점되어 왔다. 브레진스키와 힌팅톤은 이러한 민족적 배경을 갖고 있는 지배엘리트집단을 지칭하여 SRAPPS (Slavic-Stock Russian born Apparatchiks) Russian-born Apparatchiks) 라는 조어를 사용하였다. David Lane, op. cit., p.181.

그러나 공화국차원에 있어서는 오히려 비슬라브민족이 지배권을 독점하는 역차별(reverse discrimination) 현상이 발견되어 진다. ibid., p.184.

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보수파가 문제해결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령 급진개혁파를 대변하는 스타니스라프 샤탈린 대통령 경제고문도 공개서한을 통해 분리주의와 연방의 해체를 가속화하게 될 국민투표의 뜻을 경고했으며 공산당이나 비밀경찰의 중앙권력파괴를 우려하는 소유즈그룹은 더욱 강경한 입장에서 소련의 존속여부가 달려있는 중대사안을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자체가 잘못된 결정임을 주장하고 고르바초프가 자신의 정치적 도박으로 이를 감행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보수세력은 소수민족의 분리주의운동이 궁극적으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에 따른 사회기강의 이완현상이라 보고 고르바초프에 대한 공격의 고삐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민족분규의 악화는 특히 보수파의 입지 강화에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소수민족의 분리주의가 연방해체의 위기를 야기시킬 경우 고르바초프에 대한 보수파의 공격이 가속화될 것이며 그 여파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는 휘청거릴 것이다.

4. 소련사태 이후의 변화

1) 연방의 해체

9월 4일 소련최고 권력기구인 인민대표회의 임시회의는 새로운 연방형태인 주권공화국 연방(union of sovereign states)안과 과도기적 국가운영체제로서 3원집단체제를 만장일치로 채택함으로써 과거 70년동안 유지되었던 기존의 중앙집권적 연방체제가 종식되고 연방헌법은 사실상 효력을 정지하게 되었다.³⁶⁾

7개항의 정국수습안은 발트 3국과 몰다비아, 그루지아 등 5개국이 독립하며 나머지 공화국은 주권을 갖고 새로운 연방에 독자적으로 참여하되 통합군대를 유지할 것과 모든 공화국에 의한 경제협정체결을 촉구하고 있다. 고르바초프와 엘친을 포함한 10개공화국 최고지도자들은 과도기적 국가권력기구로서 국가평의회, 공화국회의와 연방회의의 양원으로 개편된 연방최고회의, 공화국간 경제위원회를 창설하였다. 소련의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 연방은 느슨한 형태의 국가연합으로서 집단방위체제와 통합군의 유지 및 핵무기의

36) 뉴욕 타임스지는 현재의 소련상황을 1787년 미국의 필라델피아헌법회의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한다. 미국헌법초안 입안자들의 문제의식은 독재와 혼란에 대한 동시적 공포였다. 그들은 중앙집권화된 권력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상호 협력과 의존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따라서 13개주들의 강한 주체의식과 독립에의 요구, 지역주의를 권력분산과 상호 견제의 제도를 통해 극복함으로써 오늘의 미국연방을 건설하였다. 그리고 헌법제정 4년후인 1791년 공권력의 남용으로 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10개의 수정조항을 첨가시켰다. 소련의 개혁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며 각 공화국간의 상호협력을 위한 연방법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동아일보, 91.9.10.

일원화된 통제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련은 발트 3개국을 포함하여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단일경제권 창설을 모색하고 있다.

새로운 주권공화국연방안을 요약해보면 새로운 연방은 공화국의 주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사실상의 국가연합(confederation) 형태³⁷⁾를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군사, 경제공동체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소련의 새로운 국가형태는 완전히 통합된 유럽공동체와 나토형 국방체제를 동시에 결합시키는 연합모형에 접근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고르바초프가 이끄는 연방정부는 설립조약에 따라 외교권과 국방권을 구성공화국과 일부분씩 나누어 갖게 될 것이며 공화국간의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자 내지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고르바초프가 연방의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하게 될 것이며 이제 서방은 모든 종류의 접촉을 공화국레벨에서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제공동체를 강조하는 느슨한 국가연합안에 대하여 대부분 공화국이 참여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인 실리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지역경제공동체가 강화되고 있는 세계적 조류속에서 대부분의 공화국의 경우 연방의 해체로 야기되는 경제적 손실을 고려할 때 (가령 최근에 우크라이나공화국의 식량공급제한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서 러시아 공화국의 연료공급제한조치가 보여주듯이 상호의존적인 경제구조하에서 대립과 갈등은 자기파멸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민족주의세력의 탈소독립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제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특히 부존자원의 빈곤을 심각히 느끼고 있는 중앙아시아 회교권공화국(우즈베크, 카자흐,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즈, 타지크, 투르크멘)들은 연방잔류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새로운 경제공동체의 수립에 대해 발트 3국의 하나인 라트비아도 완전한 주권과 독립이 승인된다는 전제조건하에 참여할 뜻을 비추고 있다. 통합을 촉진하는 변수로 경제적 고려외에도 정치적인 요소를 거론할 수도 있다.

37) 국가연합(confederation)이란 구성국가들이 국제법상 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방국가(federation)와 다르며 구성국을 통괄하는 상설기관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동맹(alliance)과 구별된다. 그러나 소련의 주권공화국연방안은 연방정부의 존재로 인하여 국가연합의 일반적 개념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련의 주권공화국연방안은 엄격한 말할 때 느슨한 연합이 아닌 느슨한 연방의 형태로서 기존의 연방체제와 국가연합체제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논자에 따라서는 국가연합과 국가공동체(commonwealth)를 구별한 후 소련의 새로운 국가형태는 영연방을 모델로하는 국가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옐친 역시 복합적인 개념으로서 자유연방(Free Commonwealth)의 개념을 사용한 바 있다. 국가공동체는 국가연합과 달리 참여국가에 대하여 외교적 제약을 가할 수 없다. 복합국가(composite state)의 제 형태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이한기, 국제법강의(서울:박영사, 1990) pp.254~257 참조.

새로운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러시아공화국의 경우 연방의 분열과 해체가 초래하는 정치적 불안정을 큰 부담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따라서 엘친은 초기의 일방적인 연방해체론에서 탈피하여 느슨한 국가연합을 통한 소련연방의 유지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서방측 역시 분열된 소련의 장래를 위협스럽게 보고 있기 때문에 통합안의 실현을 위해 무형의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느슨한 국가연합의 청사진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연방정부의 폐지를 주장하여 보다 자유로운 독립주권공화국의 자유연합을 꾀하는 카자흐공화국의 주장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존재한다.”³⁸⁾

그러나 느슨한 국가연합안의 실현가능성을 부정하고 개별공화국에 의한 연방의 완전한 해체를 예측하는 견해도 있다. 최근의 유고사태가 보여주듯이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보편적 공동체를 향한 노력과는 달리 제3세계와 탈사회주의국가들의 경우 전위적인 민족주의의 출현으로 분열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주장하듯이 민족주의의 문제는 탈이데올로기시대가 대면하게 될 가장 큰 난제중의 하나이며 특히 탈사회주의국가들의 경우 기존이념의 붕괴를 대신할 새로운 이데올로기로서 민족주의의 영향력은 당분간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³⁹⁾ 소련 전역에서 들불처럼 퍼지고 있는 민족주의의 열기가 경제적 합리주의를 압도할 경우 소련은 철저히 해체될 것이며 각 공화국은 각자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경제적인 변수도 분열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은 경제적 통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화국 상호간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 역시 시장적 질서를 통한 이해관계 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 입각할 때 연방정부의 역할은 물론 경제단일체구성에도 회의론 제기하게 되며 최악의 사태로서 내전상태로의 돌입을 예측할 수도 있다. 연방의 해체와 관련하여 대두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러시아공화국에 의한 패권주의의 등장이다. 사실상 소련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도 말할 수 있는 러시아공화국은 연방정부를 대신하여 새로운 강자로서 국수적인 민족주의 노선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연방헌법의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해체된 소련연방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러시아공화국에는 권위주의체제가 들어설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하버드대 소련문제연구소 아담 울람교수는 느슨한 국가연합과 개별 공화국으로의 완전

38) 카자흐공화국의 나자르바예프대통령은 금년 7월 26일 연방정부와 연방의회를 없앤 상태에서의 ‘독립공화국 자유연합창설’을 재의하였다. 조선일보, 8.28.

39) 후쿠야마는 종교적 갈등과 민족주의 문제를 탈이데올로기시대가 직면하게 될 두개의 난제로 파악하며 소련의 경우 범슬라브주의로 무장한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파시스트적 면모까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합종분역, 역사의 종언, (서울: 현정희, 1989), p.63.

해체의 가능성을 50대 50으로 말하고 있다.⁴⁰⁾

2) 정치적 다원주의

페레스트로이카와 더불어 전통적인 공산당일당지배의 철회는 서서히 파괴되었으나 소련에서 본격적인 의미의 복수정당제는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여 왔다. 그러나 쿠데타를 계기로 공산당이 해체됨에 따라 이를 대신할 새로운 정당의 출현이 요청되는 상황에 이르러 복수정당제의 정착은 보다 앞당겨지고 있다.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소련공산당의 역사는 몰락의 역사였다. 1987년 소련은 당간부선출을 중앙위원회의 지명이 아닌 비밀투표에 의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1987년 3월 당시기장 경선이 결정되었으며 1988년 6월 당에 대한 국가, 국민의 우위가 강령화되었다. 1989년 11월 공산당 일당지배의 원칙을 철폐하자는 요구가 일기시작하였으며 1990년 2월 이를 규정한 헌법 6조 폐지와 다당제 채택을 결의했다. 1991년 5월 군대와 국영기업체내 공산당조직의 비합법화를 선언하였으며 7월 20일 러시아내 모든 조직체에서의 공산당 세포활동금지 조치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쿠데타 이전의 시기에 이미 공산당을 무력화시키는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 일당제의 전통으로 인하여 소련의 정당체제는 파편화, 분극화되어 태아적인 상태의 경쟁구조만을 보여주었다.⁴¹⁾

공산당의 재기를 시도했던 보수세력의 쿠데타기도는 오히려 공산당의 자멸을 촉진시켰다. 고르바초프는 8월 23일 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에서 러시아공화국내 공산당의 활동을 전면 중지시키는 포고령에 서명하여 70여년의 공산당독재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후 소련 전역에서 공산당의 해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공산당일당지배를 대체할 소련정치의 새로운 질서는 엘친러시아공화국대통령에 의해 주도될 탈사회주의적인 신당과 구공산당 개혁파 중심의 민주적 사회주의정당을 양대세력으로 하는 양당체제의 윤곽을 보여주고 있다. 소유즈그룹을 대표로 하는 공산당내 보수세력은 복수정당제하에서 소수파로 전략하게 될 것이다. 논자에 따라서는 강력한 극우 정당의 출현을 예상하기도 한다.⁴²⁾

40) 아담 울람교수는 특히 우크라이나공화국이 반대할 경우 느슨한 국가연합안은 실현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조선일보, 1991.8.28.

41) 몇몇 자료에 따르면 1990년 9월까지 러시아공화국의 경우 130여개의 정당결성선포가 있었으나 모든 정당의 당원수는 합산하여 20만명을 넘지 않는다. 새로운 정당들은 거의 전적으로 당지도부의 개인적 인기에 의존하고 있으며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거의 모든 정당들은 지부를 갖고 있지 않다. 러시아에는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정당의 색이 존재할 뿐이다. 란코프 안드레이, "복수정당제로 가는 러시아 공화," 북한 통권 233호(1991년 5월호), p.34.

42) 레닌그라드대학교수인 란코프 안드레이는 70년대 칠레의 피노체트정권과 같은 강력한 반공주의자그룹의 집권을 예상하고 있다. *ibid.*, p.45.

쿠테타 이후 사태의 진전은 급진개혁파와 보수파의 이분법적 대립구도를 일변시켜 보수파가 몰락하는 가운데 급진개혁파와 온건개혁파의 대립구도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으며 보수세력의 몰락은 상대적으로 온건개혁파의 위상을 강화시켜주고 있다.

세바르드나아제 전 외무장관을 포함한 소련내 급진개혁파 주요인사들은 지난 7월 1일 공산당에 대항할만한 전국규모의 정치조직을 구성키로 합의하였다. 경제구조의 전면개혁과 인민의 재산권 및 소유권회복을 새로운 정당강령의 주요내용으로 하는 서구지향적 신당창당을 주도하고 있는 인사들은 고르바초프대통령의 수석고문인 알렉산드르 야코블레프(야코블레프는 고르바초프의 측근으로 페레스트로이카의 이론적 대부로 알려져 있다.), 엘친지파인 알렉산드르 루츠코이 러시아공화국부통령(현역공군대령으로 공산당내소장과 진보주의자의 리더이다.), 가브리엘 포포프 모스크바시장, 아나톨리 소브차크 레닌그라드시장, '5백일 계획'입안자인 스타니슬라프 샬탈린, 전국공장노조위원장인 아르카디 볼스키등이다. 고르바초프는 그 다음날 신당결성에 대하여 공식적인 지지의사를 밝힘으로써 당내 보수세력과의 관계를 단절하였다. 신당은 사실상 고르비초프와 엘친의 통합조직이 될 것이며 따라서 급진개혁파와 공산당내 진보세력이 결집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되었다. 소련 개혁파의 신문 「리테라투르나야 가지에타」지는 현공산당원중 핵심당원의 20~30%가 신당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한편 지난 7월 27일 소련공산당중앙위원회는 당의 이념노선을 전면수정하여 마르크스주의의 포기를 천명하였다. 새로운 강령안을 지지하였던 다수의 당내 개혁파 세력(마르크스주의 강령그룹)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이념의 추구를 강조하고 사회민주주의노선에 입각한 대중정당으로의 변신을 시도하였다.⁴³⁾ 이들 세력의 상당수는 사회주의로부터 이탈을 강조하는 급진개혁파의 신당보다도 근본적인 체제개혁을 전제로 한 온건한 사회주의노선에 더 공감하고 있으며, 공산주의를 포기하지 않았지만 보다 민주적인 체제를 지향하는 당내지식인 그룹과 결합하여 서구식 사회주의정당노선을 지향하는 또 하나의 세력으로서 부상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소련공산당 정치국원으로서 유일하게 쿠테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정치국가 중앙위원회로부터 탈퇴를 선언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공화국 대통령겸 공산당 제1서기는 공산당을 사회당으로 재창당시켜 민주적 사회주의 정당으로서 첫발걸음을 내딛었다. 카자흐사회당은 공산당의 수많은 오류와 실책을 비판하고 민주개혁을 당의 최고 목표로 선언함으로써 페레스트로이카의 정신을 계승할 것이라

43) 조선일보, 1991.7.28. 새 강령안은 시장제도와 사회주의가 양립가능함을 주장하고 공산당은 시대의 요청에 부응해 근본적인 민주화를 시도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주장하고 있다. 연방간류를 선언했던 10개 공화국중 러시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를 제외한 7개공화국의 경우(특히 타지크, 트르크멘, 백러시아공화국의 경우) 반공산당세력이 극히 미약하여 사회민주주의적 신당창당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⁴⁴⁾ 쿠데타 이후 세력판도의 변화는 고르바초프로 하여금 급진개혁파의 신당보다는 온건개혁파의 사회민주주의적 정당에 더 접근하도록 만들고 있으며 그는 자신의 희망이 공산당을 보다 개혁적인 신당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임을 강조하고 공산당에 대한 지나친 보복조치가 소련의 민주화에 장애가 된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하도록 만들고 있다.

3) 시장경제로의 이행

자크 들로르 EC 집행위원장은 일찌기 정치변혁없이 추진되는 소련의 경제개혁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정치권력의 향배가 소련의 경제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변수라고 지적하였다. 그동안 페레스트로이카와 더불어 꾸준히 추진되어 왔던 시장경제로의 이행은 공산당의 붕괴로 인하여 획기적인 계기를 맞게 되었다. 페레스트로이카의 본질과 관련하여 자본주의로의 회귀나 새로운 사회주의 건설이나 하는 논쟁은 이제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현시점에서 소련이 모색하는 경제개혁노선은 탈사회주의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⁴⁵⁾

소련 경제개혁안의 연혁을 살펴볼 때, 페레스트로이카추진과정에서 시장경제로의 급진적인 이행안이 때때로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파의 반발로 인하여 최종적으로는 계획경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시장제도를 도입하는 온건한 결론이 늘 채택되어 왔음을 알 수가 있다. 급진적인 개혁안의 한 예로 90년 7월의 샬탈린의 「500일 개혁안」⁴⁶⁾은 제1단계에서 긴급조치를 통해 경제개혁을 위한 법률개정을 행한 후 제2단계와 3단계에서 가격자유화, 국유재산의 사유화조치를 단행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를 마무리 한다는 구상을 계획한 바 있다. 급진적 개혁안의 또 하나의 예는 지난 6월 미·소 양국의 경제학자들이 합작으로 만들어낸 이른바 「대타협안」(Grand Bargain)이다. 야브린스키 전러시아공화국부총리

44) 황태연, "소련의 장래 정당관계전망", 한겨레신문, 1991. 9.14. 한겨레신문의 황태연특파원은 필자와 같은 전망 - 온건개혁파와 급진개혁파의 새로운 대립구도 - 을 하고 있다.

45) 쿠데타 이후의 상황에서도 상이한 분석시각이 존재한다. 혹자는 러시아사회가 갖고 있는 서구화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근거로 러시아공화국의 개혁노선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가 아닌 혼합경제체제를 지향할 것이라 예상한다. 김유남, "소련공산주의실험 74년," 김유남, 송복, 정용석공저, 사회주의이상과 그 실험(서울: 자유신문사, 1991), pp.49~50.

46) 샬탈린의 500일 경제개혁안은 책으로 발간되어 국내에서도 번역되었다. 야브린스키, 페도로프, 샬탈린의, 소련의 시장경제로의 이행, 한중만역(서울: 열린책들, 1991)

와 하버드대학에서 그레함 엘리스 등 서방 경제학자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이 개혁안은 91년부터 97년 6년간 단계적으로 소련을 시장경제로 완전히 전환시키려하며 이를 위해서 서방측의 대규모원조를 특히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G-7회담에 참석한 고르바초프는 혼합경제를 지향하는 개혁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본격적인 시장경제의 도입을 기대하는 서방세계의 실망을 자아냈다.

부시미대통령은 소련이 어설피게 사회민주주의노선을 추종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본주의의 길로 들어서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7월 26일 공산당중앙위원회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포기하는 혁신적인 신강령을 결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고르초프는 계속 사회민주주의라는 혼합경제의 이데올로기를 강조하여 보수와 개혁의 중간적 통합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혼합경제모델에 대한 집착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지난 7월 1일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중요한 결정을 구내적으로 감행하였다. 소련연방최고회의는 국내기업의 50%를 내년말까지 국가통제에서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기업민영화법안」을 승인했다. '기업에 대한 국가통제해제 및 민영화에 관한 기본원칙법안'을 공식명칭으로 하는 이 법안은 내년말까지인 1단계에서 소련기업의 40~50%를 민영화하고 95년말까지인 2단계에서 60~70%의 민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영화법안은 구체적인 방법론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지만 생산수단의 국유화라는 사회주의의 기본원리를 포기하는 선언이라는 점에서 여태까지 취해온 일련의 경제개혁조치중 가장 획기적인 결정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양대지주를 시장제도와 사유재산제라고 할 때 소련은 금년 봄의 가격자유화조치와 7월의 민영화법안을 통하여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향해 이미 상당한 정도 접근해 나갔다고 말할 수 있다. 국가통제가 아닌 가격메카니즘에 입각한 자율적 가격결정원리의 채택은 임금, 이자, 환율 등 경제의 모든 부문에 적용될 것이다. 사유재산제의 회복을 선언하고 있는 민영화법안은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론을 모색하는 중이다.⁴⁷⁾ 고르바초프는 이미 외국기업들이 소련산업체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다만 국가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의 매매와 사유화

47) 사유화의 방법론으로써 이제까지 소련에서 논의된 것을 정리하면 기업이 노동자에게 직접 매각하는 방법, 주식회사로 이행한 후 그 주식을 매각하는 방법, 임대자에게 기업을 매각하는 방법, 경매형식에 의한 기업의 매각방법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러시아공화국은 국민 1인당 7천루블을 무상으로 지급하여 민영화된 기업의 70%를 우선순위에 따라 국민에게 매각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주식의 30%는 해당기업의 노동자와 퇴직자에게 무료로 배분된다. 이기영, "소련경제, 그 파국의 뿌리", 신동아 통권 385호(1991년 10월호), p.584.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러시아 공화국최고회의는 11월 1일 급진적 경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플레이와 실업, 권력독재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엘친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킴으로써 가격자유화와 국영기업민영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기대 되어지고 있다.

고르바초프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방세계는 불투명한 소련의 장래를 문제삼아 소련에 대한 경제원조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그러나 쿠데타의 실패로 공산정권의 해체가 분명해진 오늘의 시점에서 서방세계는 최악의 경우 유고의 내전을 답습하게될 소련사태가 서방측의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더 이상 소련의 혼란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소련의 시장경제건설을 위한 상당한 지원을 행하게 될 것이다. 이미 G-7회담에서 서방국가들은 소련에 대하여 IMF와 IBRD준회원자격을 부여하고 대소 기술원조강화를 결의하였으며 금년 10월 5일 소련은 국제통화기금 특별준회원자격으로 가입함으로써 자본주의세계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대타협안을 통해 국제통화기금에 대해 2천5백억달러의 지원을 요구했었던 소련은 서방의 경제원조를 끌어내기 위해 보다 강도 높은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감행할 것이며 소련의 세계자본주의 경제질서속으로의 편입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속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소련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로서 보수세력의 잠재적인 반발과 미온적인 서방측 원조의에 자본주의적 경제규범의 부재를 지적할 수 있다. 새로운 생산양식을 지향하는 제도의 전환에 있어서 이에 상응하는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가 요구되며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소련은 상당한 기간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⁴⁸⁾

5. 결 론

소련의 체제변혁과정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는 8월 쿠데타이전의 시기와 이후의

48)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률의 변화뿐만 아니라 경제주체의 형태가 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소련국민들의 의식혁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지난 70년간의 배웠던 것을 되도록 빨리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P. B. Stephan, Perestroika and Property: The Law of Ownership in the Post-Socialist Soviet Union,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winter 1991, Vol. 41. 가령 소련사회주의가 그동안 구축해온 정치문화의 특징적 일면으로서 평등주의원칙과 이것이 야기하는 재분배에 대해서 진흥찬, "소련사회주의 이론과 페레스트로이카," 한국사회주의체제연구협의회 1991년 연차학술대회 참조.

시기를 나누어 고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쿠데타 이전의 시기에 있어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는 사회주의의 근본원리를 상당부분 폐기하면서도 서구체제로의 복귀를 거부하고 양체제의 조화를 꾀하는 혼합모델을 모색하였다고 보여진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최초의 의도가 많이 퇴색되었지만 소련 정부는 여전히 완화된 의미의 사회주의 질서를 고집해 왔다. 물론 그것을 두고 진정한 사회주의의 실현 혹은 사회주의체제의 자기강화라고 해석하는 것은 앞에서 지적했듯이 잘못된 논리라고 생각된다. 소련의 경우 모든 변화는 국가의 통제하에 당의 이름으로 추진됨으로써 동구사회주의국가의 변혁과정과는 달리 적어도 외견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고 페레스트로이카는 최소한의 기득권 수호를 전제로 하는 위로부터 혁명의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8월 사태이후 정국의 주도권을 엘친이 이끄는 러시아정부가 장악하면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는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소련은 이제 본격적으로 탈사회주의 노선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하였다. 군부쿠데타를 무산시키는 순간부터 소련사태는 이미 밑으로부터의 혁명의 양상을 보여주었으며 공산당은 물론 연방정부의 권한마저 허물어져버린 상황에서, 분출되는 민중의 욕구를 수렴하기 위한 급진개혁파의 고군분투는 소련의 사태를 동구의 변혁과정과 유사하게 만들고 있다. 소련이 사회주의로부터 결별을 고함으로써 기존체제를 개혁한다는 의미에서 페레스트로이카는 이미 그 과정을 종료하였다. 쿠데타이후 소련사회는 양의 질로의 변증법적 전환을 경험하고 있으며 포스트-페레스트로이카의 시대는 체제건설의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성의 교지는 페레스트로이카의 시기에 있어서 변혁의 기수였던 고르바초프로 하여금 이제 자신의 역할을 다음 주자에게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동구의 현 상황이 그러하듯이 탈사회주의의 시도가 곧 서구체제로의 성공적인 이행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다. 공산당의 몰락에 따른 정치적 다원주의와 시장경제의 본격적인 도입에도 불구하고 사태는 유동적이며 과거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의 일탈도 가능하다. 극단적인 가정으로서 보수파의 재기를 점쳐볼 수도 있으나 보다 조심스러운 예측중의 하나는 제3세계형 권위주의체제의 성립가능성이다. 급격한 경제발전의 요청과 전투적인 민족주의의 등장으로 소련은 이전의 근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⁴⁹⁾

49) 과거 소련은 근대화를 위하여 전체주의적 동원(totalitarian mobilization) 방식에 호소해 왔다. 전체주의적 동원체제의 구체적 논의는 Charlmers Johnson, "Comparing Communist Nations", Charlmers Johnson, *ibid.*, pp.1~32 참조. 관료제모델도 소련의 근대화 방식을 설명하는 하나의 패러다임이다. 다양한 분석시각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는 Stephen White, *The Comparative Study of Communist Studies*, Ra Chang Joo & Baek

정치적 민주주의가 성공적인 자본주의에 의한 하부구조의 결실이라고 할 때 소련은 시장경제체제로의 편입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토대를 구축하는 동안 정치적으로는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강력한 권위주의정부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동구와 역사적 경험을 달리 하는 소련의 경우 문제는 좀 더 심각한 양상을 보일 것이며 서구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현 시점에서 소련의 장래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민족문제이다. 체제변혁의 원동력을 제공하였던 소련의 민족주의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분열의 역기능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매우 위험한 수위에 이른것 같다. 배타적 민족주의의 발호는 경제공동체의 이상을 파괴하고 이에 편승한 비민주적 정권의 출현을 야기함으로써 소련의 장래를 매우 불투명하게 만들것이다. 소련사태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온 엘친주도하의 러시아정부는 민족분규해결에 다수민족으로서 수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⁵⁰⁾ 그러나 16개의 자치공화국, 100여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러시아역시 일부 자치공화국과 소수민족의 독립운동으로 인하여 분열의 위기를 맞고 있다.

IV. 中國式 社會主義의 理念과 展望

1. 序 論

1949년 毛澤東이 중국 대륙을 석권한 이후 전개된 中國의 共產革命에 뒤이어 4반세기만에 鄧小平에 의해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實用主義革命은 중국의 제2공산혁명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중국사회와 외부세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중국적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였다는 毛澤東思想을 지도이념으로 하여, 中國共產黨은 中國의 전통문화와 사회구조를 뒤엎는 특이한 社會主義 사회로 中國을 개조하려고 노력하여 왔으며, 그 결과로 수천년 중국사회에 자리잡아 왔던 生産樣式과 社會構成 원리를 파괴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社會主義·全體主義 틀을 들여 놓았

Byenong Hoon(eds.), Comparative Communist Studies : Scope and Method, (Dae Young Moonwhasa, 1988) 참조.

50) 금후 소련제국의 흥망은 비러시아계 엘리트의 충성심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는 주장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게하르트 시몬, "소련의 민족정책," 동구연구 제5집, 1991, p.55.

다. 그러나, 中國共產黨의 열성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中國社會를 그들이 理想으로 하는 共產社會로 개조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革命이데올로기는 혁명 성취와 동시에 새로운 체제의 管理이데올로기로 역할을 달리하기 때문에 革命的 理想을 실현하는 저해요소로서의 현실여건에 부딪혀 순탄하게 혁명과업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毛澤東 사망후 교조적이며 급진적이던 四人幫을 중심으로 한 文化革命 추진세력과 현실 적용을 강조해오던 온건노선의 鄧小平 등의 實用主義 세력과의 권력투쟁을 거쳐,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鄧小平 주도의 제2혁명, 즉 實用主義路線의 시대로 들어서게 되었다. 1978년 12월의 중국공산당 제11기 3中全會를 계기로 굳혀진 鄧小平體制의 성격과 이 체제가 설정한 정책노선에 따라 中國은 엄청난 변신을 시작했으며, 1980년대와 90년대는 이러한 변신이 구체화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鄧小平體制가 주장하고 있는 '中國式 社會主義'를 규명하기 위하여 첫째 鄧小平體制의 實用主義路線의 이데올로기적 특징을 분석해보고, 둘째 이러한 實用主義路線下에서 주장되고 있는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을 규명한 후, 이에 입각하여 '中國式 社會主義'의 특징을 추론하여 보려 한다. 세계, 이러한 바탕위에서 '中國式 社會主義'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 갈 것인가를 전망해 보려 한다.

2. 鄧小平體制의 實用主義路線의 理念的 特徵

중국의 정치과정에는 이데올로기와 政策定向이 다르고, 權力利益이 상충되는 두개의 理念, 즉 毛澤東思想과 實用主義가 존재하며, 中國政治의 變化는 이들 두 노선과 세력의 상호갈등과 대립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毛澤東思想과의 비교를 통해 實用主義路線의 특징을 분석하기로 하겠다.⁵¹⁾

1) 經濟決定論

毛澤東은 중국이라는 후진사회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실천함에 있어 지도층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비록 객관적인 환경이 혁명수행에 미흡하더라도 혁명을 앞당길 수 있다는 생각하에 공산혁명을 성공시켰다. 毛는 공산주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上部構造의 변혁이 生産力의 발전에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즉, 경제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존재한다고해서 이것만으로 공산주의적 목표가 자동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51)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康根亨, "中共 實用主義路線의 이데올로기적 性格: 毛澤東思想과 관련하여," 濟州大學校論文集, 제25집(1987), pp.323~341 참조.

아니라는 것이다. 적절한 사회적 가치들이 확산되어 미래 공산주의 사회의 물질적 선행조건들을 창조하는 과정에 내면화되지 않는다면 공산주의 사회는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다.⁵²⁾

이와 같이 毛는 역사의 창조와 공산주의적 미래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는 적절한 혁명정신과 도덕적 가치를 간직하고 있는 인간임을 강조한다. 전체인민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할 때, 사회주의건설은 이룩되며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에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인간의 精神이라는 主意主義(Voluntarism)의 입장이며, 따라서 사회주의 혁명은 곧 인간의식의 혁명임을 의미한다. 요컨대, 객관적 세계(환경)의 전환은 주관적 세계(정신)의 전환으로써만 가능하기 때문에 객관적 환경을 공산주의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정신을 우선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해야 된다는 것이다.⁵³⁾

그래서 毛澤東은 비록 생산수단의 소유제가 개인에서 共同이나 集團所有制로 바뀌었다고 해도 개인의 意識狀態는 그에 상응해서 변하지 않고 과거의 잔재를 지속적으로 내포하고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같은 논리를 뒤집어 보면 비록 경제적·기술적 여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군중의 意識은 客觀的 與件에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얘기도 성립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毛는 경제·기술적인 客觀的 條件보다 농민들의 集團志向의 意識狀態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1955년에 農業合作社를 결성했으며, 大躍進運動 때도 8억의 中國人民들이 共產主義 건설의 정열에 불타고 있기 때문에 客觀的 條件의 미숙을 능히 보충하여 고차원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精神力으로 物質的 基盤을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다분히 唯心論的 主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⁵⁴⁾

이와 같이 毛澤東이 사회주의 혁명에 있어 상부구조의 변혁을 강조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毛가 人間中心主義的 主意主義를 선호하는 점에 기인하겠으나, 중국혁명의 객관적 현실이 이를 더욱 부채질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중국의 社會主義 형성과정이 정통 마르크스주의적 발전경로를 밟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자본주의가 성숙단계에 도달하여 자본주의적 모순이 첨예화될 때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혁명 의식이 성숙되며, 따라서 프롤레타리아가 주체가 되는 사회주의 혁명이 자연발생적으로 일어

52) Maurice Meisner, *Marxism, Maoism and Utopianism* (London: The Univ. of Wisconsin Press, 1982), pp.121~122.

53) 柳世熙, "中共의 이데올로기적 變化: 毛澤東의 毛思想과 鄧小平의 毛思想," 中蘇研究, 제 8권, 제4호(1984/5 겨울), p.21 참조.

54) 鄭鍾旭, "毛澤東思想과 마르크스主義의 中國的 受容," 社會科學과 政策研究, 제5권, 제1호(1983년 7월), pp.62~63 참조.

남으로써 사회주의가 도래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의 사회주의 혁명은 이러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기본적으로 封建制度가 지배적인 사회로부터 作爲的으로 社會主義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 정치엘리트가 이데올로기를 포함한 사회의 전반적인 上部構造에서 말하는 능동적 혹은 주도적 역할이 필연적으로 강조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毛澤東思想에서는 사회주의혁명 완수를 위해서는 上部構造를 먼저 개혁해야 한다는 정치결정론적 입장을 취하는 것과는 달리 鄧小平의 實用主義에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역사와 경제발전의 객관적인 법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즉, 인간의 역사가 인간의 의지와 욕구와 무관한 어떤 不變의 法則에 의해 움직여 간다고 보는 것이다. 사회의 발전은 물질세계의 발전과 동일한 것이며, 따라서 객관적 법칙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한다. 마치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법칙들이 역사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역할 수 없듯이, 사회주의 사회의 발전을 지배하는 특별한(거의 객관적인) 경제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이다.⁵⁵⁾

따라서 진보는 사회주의 경제발전의 객관적인 법칙을 발견하여 그것에 적합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달려있게 된다. 이러한 객관적인 유물론적 역사법칙에 대한 신념은 대체로 점차 마르크스 이론의 경제결정론적 해석쪽에 기울고 있는 중국 공산주의의 새로운 조류속에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것은 사회주의를 위한 물질적 전제조건에 관련된 문제에 관한 지배적인 견해 속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毛澤東은 사회주의로의 역사적 전환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근대적인 경제발전과정과 더불어 반드시 사회적 관계와 대중의식의 계속적인 변화과정이 수반되어야만 한다고(사실은 그것이 경제발전을 좌우한다고) 믿었던 반면에, 毛 이후의 實用主義者들은 먼저 생산력의 발전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것이 사회주의 사회를 위한 결정적인 전제조건이 된다는 정통 마르크스이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와 같은 필수불가결한 경제적 전제조건을 만들어 가는 과정은 기나긴 역사적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한다.⁵⁶⁾

이와 같은 역사적 발전 법칙들은 인간의 의지에 의해 바뀌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黨의 주관적인 의도’로도 어쩔 수 없는 것이므로 인간은 객관적인 법칙들이 역사적 현실에 드리우고 있는 제약조건들을 이해해야만 하고 그것에 따라야 된다는 것이다. 사실상 이러한 주장들은 모택동시대의 경제적 실패와 정치적 혼란이 인간의 의지 및 의식

55) Maurice Meisner, *op. cit.*, pp.218.

56) *Ibid.*, p.219.

등의 요소들에 대한 지나친 강조와 사회적 생산관계의 성급한 변혁들로부터 초래된 것이 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上部構造가 역사발전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생각은 이제 임포와 4인방에 의해 선전된 반동적 이론으로 비판되고 있다.⁵⁷⁾

이러한 맥락에서 實用主義者들은 사회주의적 미래가 궁극적으로 객관적인 역사·경제적 법칙들의 비인격적인 작동에 의해 달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더구나 바로 生産力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진정한 社會主義 사회의 도래를 위한 최우선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이라는 반박적인 주장은 그 과정의 장기성과 비인격성이라는 두가지 특징을 모두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가난하고 후진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가야할 길은 멀고 험한 길이며, 최후의 목적지는 머나먼 곳에 있다. 그러한 와중에서 인간의 에너지는 전적으로 생산적 작업에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社會主義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필수적 전제조건인 경제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⁵⁸⁾

따라서 오늘날 중국의 實用主義者들의 정신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역사발전에 관한 혁명적 개념이 아니라 진보적인 개념이며, 또한 그것은 인간의 욕망과 이상적인 희망들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객관적인 법칙들에 의해 좌우된다는 신념이다. 결국 이러한 생각은 중국이 사회주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민들의 사회주의적 정신무장 보다도 우선 경제적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해 생산력의 발전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經濟決定論的 立場이라고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1984년 10월 中國共產黨 12期 3中全會의 '經濟體制改革에 관한 決定'에서 "社會主義의 근본적 임무는 사회생산력 발전으로 사회의 富를 증대시켜 인민의 날로 증가하는 물질적 수요와 문화적 수요를 부단히 충족시키는 것이다"⁵⁹⁾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2) 階級和合

상술한 바와 같이, 上部構造의 의식개조를 강조하는 毛澤東思想은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도 끊임없는 계급투쟁과 不斷革命을 강조한다. 반면 鄧小平의 實用主義는 사회주의하에서는 계급투쟁이 이미 소멸했다고 보고, 계급화합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마르크스와 레닌은 일단 사회주의체제가 성립되면 프롤레타리아계급의 독재로 계급투쟁은 종식되는 것으로 본데 반하여, 毛澤東은 사회주의 체제내에서도 프롤레타리아계급에 적대되는 계급이 출현될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요소의 제거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57) *Ibid.*, p.220.

58) *Ibid.*, p.220~221.

59) "關於經濟體制改革的決定," 人民日報, 1984年 10月 21日.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한다.⁶⁰⁾

이러한 毛澤東의 계급투쟁론이나 不斷革命論은 모든 현상을 대립과 갈등으로 보는 그의 '矛盾論'⁶¹⁾에 근거한 것이다. 그의 '矛盾論'은 우선 矛盾의 보편성을 강조한다. 자연계의 변화는 주로 자연계에 내재하고 있는 内部的 矛盾의 발전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며, 사회적 변화는 주로 사회의 内部的 矛盾의 발전, 다시 말하면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 계급 상호간의 矛盾, 새로운 것과 낡은 것 사이의 矛盾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들 사회의 내부적 모순의 발전이야말로 모든 사회가 발전하는 원동력이고 그러한 矛盾의 法則이 바로 社會發展의 法則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矛盾은 자연계, 인간사회를 막론하고 어떠한 사물에 있어서나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특히 인간사회에 있어서 矛盾없는 사회란 있을 수 없다. 봉건사회는 봉건사회 대로의 모순을 가지며, 자본주의사회는 자본주의사회 대로의 모순이 있으며, 그리고 사회주의사회에 있어서도 역시 그것 대로의 矛盾을 내포하고 있다고 毛澤東은 설명한다.⁶²⁾ 그러므로 모순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변증법을 부인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사회의 모순은 그것의 해결책이 다른 것처럼 성격면에서도 서로 다르다. 그러나 어떤 시대의 社會도 끊임없는 모순을 통하여 발전해간다. 사회주의사회도 역시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의 모순을 통해 발전한다. 이상주의(Idealism)와 유물주의(Materialism)간의 모순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소멸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즉 주관과 객관 사이,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의 矛盾이 상존하는 유물주의와 이상주의 사이의 모순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사회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⁶³⁾ 이처럼 어떠한 사회의 어떠한 요소에도 矛盾은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곧 그러한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운동이 보편적으로 恒存함을 의미한다. 인간사회에 있어서 内部矛盾을 해결하고자 하는 運動은 바로 革命이다. 따라서 모든 사회는 革命의 가능성을 안고 있으며, 사회가 각종의 矛盾을 안고 있는 한, 不斷한 革命의 필연성과 필요성을 내포하기 마련이라는 것이 바로 毛澤東의 矛盾理論의 귀결점이 된다.

예컨대, 중국공산당이 중국대륙을 석권한 후,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계급과 계급모순 및 계급투쟁이 계속 존재한다고 모택동은 보았으며, 그것이 그들이

60) 유세희, "中共의 이데올로기적 변화: 毛澤東의 毛思想과 鄧小平의 毛思想," p.23.

61) 毛澤東選集, 第1卷(北京:人民出版社, 1953), pp.287~326 참조; 자세한 논의는 金河龍, 中國政治論(서울:박영사, 1985), pp.89~109 참조.

62) 毛澤東選集, 第1卷(北京:人民出版社, 1953), p.295.

63) Stuart R. Schram, *The Political Thought of Mao Tse-tung* (London: Frederick A. Praeger, Publisher, 1963), p.236.

정권 수립후 여러 차례에 걸쳐 정치·사상·문화영역에서 整風運動을 전개하게된 이유라고 설명한다. 毛澤東은 계급이 단순한 생산수단의 소유관계에 기초하여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意識, 思想 및 態度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상과 태도를 씻어버리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계급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록 사회주의 제도가 기본적으로 확립되어, 생산수단 소유제를 개조하는 면에서는 근본적으로 승리하였다고 할지라도, 思想 이데올로기의 면에서 無產階級·資產階級 중 어느 쪽이 이기고 지는가 하는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장기간의 투쟁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그 승리가 확정지어지는 문제라고 보았다.⁶⁴⁾

이상의 矛盾論에 기초한 不斷革命論은 모순의 해결이 兩者간의 調和나 和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쟁이나 갈등을 통해 기본적으로 강자가 약자를 제거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一分爲二論’⁶⁵⁾에 기초한다. 唯物辯證法은 定立→反定立→綜合으로 한 단계의 발전이 완성되면, 다시 綜合이 定立이 되어 反定立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며, 定立에서 反定立이 분리되어 대립되는 소위 ‘一分爲二’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一分爲二’는 혁명적 唯物辯證法의 철학이며 無產階級의 세계관이다. 무산계급은 그러한 세계관에 의해서 사물을 관찰한다. 모순은 사물 그 자체의 고유한 것이며, 모순의 두 측면은 통일되어 있기도 하고 서로 투쟁하고 있기도 하며, 모순은 사물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립면의 통일성은 상대적인 것이며 대립면의 투쟁은 절대적인 것이다. 그 때문에 유물변증법의 임무는 원래 矛盾을 덮어 숨기는 것이 아니라, 모순을 폭로하고, 모순해결의 올바른 방법을 찾아내고, 모순의 轉化를 촉진시킴으로써 세계를 혁명적으로 변혁시키는 목적을 완수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무산계급이 이러한 세계관에 의해서 계급사회를 분석하는 것은 계급모순과 계급투쟁을 인식하여 계급투쟁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임을 자각하고, 계급투쟁을 끝까지 수행하여 사회변혁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⁶⁶⁾

반면, 鄧小平의 實用主義의 계급 및 계급투쟁에 대한 견해는 이와는 매우 대조적이다. 실용주의자들은 정치적·사상적 태도에 따라 계급을 규정하는 毛澤東思想의 견해는 마르

64) 김하룡, 앞의 책, p.102; 안병준, 中共政治外交論(서울:박영사, 1986), pp.241~242 참조.

65) ‘一分爲二論’은 모의 주장으로 매 사물은 모두 모순되는 양면을 지니고 있어 統一되면서도 투쟁하게 된다. 고로 자본주의 사회 중에는 노동계급과 자본을 가진 계급이 있고, 사물에는 진리와 비진리가, 혁신과 수구, 진보와 퇴보가 있듯이 모든 사물에는 二重性이 있다는 것이다. “中國社會各階級的分析”, 毛澤東選集 第1卷(北京:人民出版社, 1953), pp.3~4.

66) 김하룡, 위의 책, pp.100~101 참조.

크스의 계급론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계급이란 사회의 경제구조에서 점유하는 개인의 위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중국사회의 경제구조가 변모된 1956년 이후의 계급과 계급관계를 사회주의 개조가 있기 이전의 계급관계와 동일시하는 것은 비마르크스적 견해라고 본다. 다시 말하면, 프롤레타리아專政이 확립되고 집단화와 국유화와 같은 사회주의 개조가 완결된 1956년에 사회주의 혁명은 사실상 종결되었으며 대규모의 계급투쟁을 더 이상 계속할 근거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즉 사유재산제도가 근본적으로 제약되고 집체경제가 절대적인 우위를 확보한 중국사회에서 계급투쟁이 계속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실용주의노선에 의하면, 사회주의 사회의 주요모순은 계급간의 모순과 갈등이 아니라 경제생활의 향상을 바라는 대중들의 요구와, 그에 부응할 수 없는 중국의 경제력 낙후성에서 파생되는 모순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중국사회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모든 계층이 협력 단결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던 것이다.⁶⁷⁾

이러한 實用主義과의 주장은 唯物辨證法에 대한 또 하나의 해석인 ‘合二而一論’⁶⁸⁾에 근거한 것인데, 이는 모순의 해결이 양자의 調和와 和合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해석이다. 즉, ‘二가 합해서 一이 된다’는 주장은 唯物辨證法이 定立에서 反定立이 분리되어 대립되는 소위 ‘一分爲二’의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또한 동시에 定立과 反定立의二者가 합쳐서 綜合의 一로 이루어지는 統合의 과정을 내포한다. 따라서 유물변증법은 전자인 ‘一分爲二’ 과정보다 후자인 ‘合二而一’의 과정이 그 본질을 이룬다는 것이다. 즉 ‘對立面的 統一’, ‘矛盾의 統一’이라는 것은 두개의 對立面이 불가분으로 결부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이 ‘合二而一論’은 矛盾의 對立, 즉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두 노선 사이의 투쟁, 무산계급과 자산계급 두 계급 사이의 대립을 본질적으로 발전의 원동력으로 보는 毛澤東思想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矛盾調和·鬭爭否定的 변증법이론이었으며, 따라서 階級和合을 앞세

67) 1978년 제11기 3中全會에서 중국 공산당은 계급투쟁의 종식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외적의 침략이 없는 한 중공 당의 중심과제는 경제발전과 4개 현대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人民日報, 1978년 12월 24일. 徐鎮英, “毛澤東의 政治經濟學과 4個 現代化 政策의 發展理論比較”, 中國學論叢, 고려대중국문제연구소, 1984년 4월, pp.137~138에서 재인용.

68) ‘合二而一論’은 1963년 중국공산당 고급당학교 교장이었던 楊獻珍이 주장한 것인데, 이로 인해 毛澤東派의 反毛派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어나게 되었다. 자세한 논의는 김하룡, 앞의 책, pp.98~101 참조.

‘合二而一論’에 대한 비판에 관해서는 D.W. Fokkema, “Chinese Criticism of Humanism: Campaign Against the Intellectuals, 1964~1965,” *The China Quarterly*, No.26 (April-June 1966), pp.71~74 참조.

우는 劉少奇, 鄧小平 등의 調整政策을 유물변증법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계급투쟁을 부정하는 주장은 상기한 바의 1978년 11기 3중전회 뿐만 아니라 1979년 6월 제5기 全國人民代表大會 제2차 회의시 현 중국 당국의 정부활동보고에서도 명백히 드러났다. 즉, “계급으로서의 지주계급·부농계급은 이미 소멸하였다. 계급으로서의 자본가도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 계급 가운데 노동능력이 있는 압도적 다수는 이미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사는 노동자로 개조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四人幫의 잔존자나 잘 개조되지 않은 극히 소수의 지주, 낡은 착취계급의 일부 잔존자들에 대해서는 무산계급독재를 실행해야 한다. …그러나 금후 대규모의 대중적 계급투쟁을 진행시킬 필요는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⁶⁹⁾고 천명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 현당국의 계급분석은 사회주의 단계에 있어서도 자산계급과 무산계급 사이의 대립·모순은 엄연히 존재하며, 끊임없이 계급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毛澤東의 不斷革命 및 矛盾論을 크게 수정한 것이며, 결국 毛가 배격하였던 階級和合의 ‘合二而一論’으로 복귀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能率主義

앞에서 서술한 路線의 대조는 政策의 내용에서도 잘 반영되었다. 毛澤東思想은 平等의 실현을 정책목표로서 삼지만, 實用主義는 能率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계급투쟁 자체가 결국 계급없는 共產主義社會를 목표로 삼고 추진하는 것이므로 平等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實用主義는 經濟第一主義로서 現代化를 목표로 하므로 생산과 조직에 있어서 能率을 중시하게 된다.

平等主義는 毛思想에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의 주제이다. 대약진을 촉진했을 때 毛는 도시와 농촌, 근로자와 농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간에 격차를 없애고 모든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원하는 바를 가질 수 있는 共產主義社會를 앞질러 실현하려고 기도했던 것이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1958년의 ‘人民公社’⁷⁰⁾였다.

69) 人民日報 1979年 6月 26日.

70) 人民公社는 집단소유제의 기초위에 농업, 공업 및 상업이 결합된 사회주의적인 경제조직이다. 인민공사는 1958년에 毛澤東이 ‘三面紅旗’ 정책의 하나로 몇몇 高級農業生產合作社를 연합하여 만든 조직이며, 三級(人民公社, 生產大隊, 生產隊) 所有制를 채용하였고 생산대를 기본 재산단위로 한다. 인민공사는 政社合一(정치권력과 경제조직의 일체화)의 조직으로서 농촌의 기층행정단위이기도 하다. 極東問題研究所編, 中共用語·情報辭典(서울: 극동문제연구소, 1986), p.381 참조.

경제정책에 있어서 毛는 國家計劃과 集團人原則을 강조하는 바, 인민공사가 대단위로 조직되었던 1958년 말 한 때 자유시장을 전면 중단한 적이 있었다. 약 5천호로 구성된 人民公社는 모든 생활을 집단화했다. 즉, 인민공사가 결성된 후에는 모든 토지를 집단화했고, 개인이 경작하던 自留地마저도 몰수한 적이 있었다. 공장생산도 국유화된 공장에서 근로자는 위에서 내려온 국가계획에 의거하여 생산을 할 수 밖에 없었다.⁷¹⁾

이른바 毛澤東이 추구하는 사회주의사회란 모든 불평등이 점차로 소멸되는 사회이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정책에서도 富의 창조, 즉 生産力의 증가라는 문제보다도 共同富裕의 공산주의사회에로의 접근이란 차원에서 富의 균등분배문제를 더욱 중요시했다고 하겠다. 따라서 毛思想은 부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個體經濟의 활동범위를 가능한 억제하고 集團經濟의 역할을 확대하려고 하는가 하면, 산업구조의 불균형발전과 集團과 集體, 또는 個人과 個人간의 불평등을 점차로 감소시킬 수 있는 경제정책을 강조한다.⁷²⁾ 예를 들면 集體所有權의 범위가 넓고 규모가 큰 소위 ‘一大, 二公’의 人民公社의 우수성을 강조한다든가 또는 按勞分配의 社會主義 分配法則을 근본적으로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소득의 불평등을 억제하고 대중의 물질주의적 성향을 극소화할 수 있는 大寨式 分配制度를 확대·실시하려고 하였던 것이다.⁷³⁾

한편, 鄧小平의 實用主義는 毛澤東에 의해 강조된 지나친 平等主義가 공산주의자들이 최종목표로 하는 이상적인 유토피아적 共產主義에서나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서 한참 사회주의를 건설해 가야 할 현단계로서는 부적합하다고 본다. 平等主義는 노동의 내용이나 실적에 관계없이 균등한 물질적 반대급부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일에 대한 의욕과 창의성을 잃게 만들고 서로 남에게 일을 미루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생산에 있어서 효율을 높일 수 없고 낭비를 가져오게 된다고 한다.

生産力의 발전에 최고목표를 두고 있는 實用主義는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을 하지 않아도 국가가 밥을 먹여주는 던저도 깨지지 않는 쇠밥그릇(鐵飯碗)을 깨어 버려야 된다고 주장한다. 밥그릇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실적에 따라 크기도 달라야 하고 밥그릇에 담기는 음식의 내용도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⁷⁴⁾

71) 안병준, 앞의 책, p.245.

72) 郭大江, “走社會主義 共同富裕的道路”, 人民日報, 1975年 8月 9日.

73) 大寨式 분배제도란 自我評價와 공개토론을 통하여 집단내부의 화합을 꾀하며 도덕적 작업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즉, 모든 농민은 같은 工分(작업점수)을 받기 때문에 힘센 농부와 약한 농부 사이의 소득격차는 적으며, 일 잘하는 농민은 더 열심히 일하려는 자극을 상실하게 된다. 李相俊, 中共經濟論(서울: 박영사, 1985), p.129 참조.

74) 유세희, 앞의 글, p.25.

이러한 실적에 따른 배분이라는 能率主義政策은 1984년 10월 中共黨 第12期 3中全會에서 채택된 '경제체제개혁에 관한 결정'에서 "많이 일하면 많은 보수를 지급하고 적게 일하면 적은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두뇌노동과 육체노동, 복잡노동과 단순노동, 숙련노동과 미숙련노동, 힘든 노동과 힘들지 않은 노동과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일부 지역, 일부 기업 및 일부 사람이 근면하게 노동하여 먼저 부유해져야만 대다수 사람에게 강렬한 호소와 고무적인 작용을 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갈수록 많은 사람이 한 파도 한 파도씩(一浪接一浪) 부유해질 수 있다. …… 일부 사람을 격려하여 먼저 부유하게 하는 정책은 사회주의 발전법칙에 부합하며, 전체사회가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다."⁷⁵⁾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업적이나 능률에 따른 차등 배분의 원칙 천명은 현재 중국 당국이 추진중인 企業自主權의 확대, 市場調節機能의 도입, 가격체제의 합리화, 경제책임제와 노동에 따른 분배, 농촌에 있어서의 包產到戶制에 의한 인민공사의 해체와 脫集團化 등의 政策 속에 구현되고 있으며, 이는 다분히 물질적 유인과 직결되는 能率主義에 따른 결과인 것이다.

能率主義에 따른 당연한 귀결로서, 實用主義는 전문지식을 강조하며 전문가에 대한 우대를 주장한다. 이는 毛澤東이 교육 및 관료체제에 있어 공산주의 사상을 중시하는 '紅'에 치중하여 전문지식 계층에 대해 기본적으로 불신했던 것과는 달리, 鄧의 實用主義는 전문 지식인 등의 '專'을 더 중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鄧小平의 實用主義路線의 특징은 經濟決定主義, 唯物主義, 階級和合 및 能率主義로 압축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實用主義는 社會關係와 上部構造는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능률주의를 강조하며 따라서 생산력의 발전을 우선시하는 '經濟第一主義'의 입장이라고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3. 社會主義初級階級論과 中國式 社會主義

1) 社會主義初級階級論의 意味

상술한 바와 같이 生産力 發展을 최우선시하는 鄧小平體制는 그것의 논리적 귀결로서 社會主義初級階級論을 제시하고 있다. 1981년 6월 발표된 '建國 이래 黨의 약간의 歷史問題에 관한 決議'에서도 중국은 사회주의제도가 이미 확립된 사회주의사회이지만, 중국의 사회주의는 초급단계에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1982년 12차 당대회에서 당시 총서기였

75) "關於經濟體制改革的決定," pp.279~280.

던 胡耀邦도 “중국의 사회주의 사회는 현재 초급발전단계에 있으며 아직 물질문명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1986년 9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2기 6중소회에서 통과된 ‘사회주의 정신문명의 건설에 관한 결의’에서도 중국은 아직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처해 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노동에 따른 분배와 사회주의 상품경제의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⁷⁶⁾

1987년 10월 개최된 中國共產黨 제13차 全國代表大會에서 당시 총서기였던 趙紫陽은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노선을 따라 전진하자’는 정부공작보고에서 社會主義初級段階論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⁷⁷⁾

趙紫陽은 中國이 社會主義初級段階에 처해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첫째, 중국사회는 이미 사회주의 사회이며, 둘째 중국의 사회주의 사회는 아직도 초급단계에 처해있으므로 중국은 반드시 이러한 실제에서 출발해야 하며, 이 단계를 초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근대 중국의 구체적인 역사조건 아래서 중국 인민들이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전된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혁명발전 문제에 있어서의 기계론이며, 우경적 착오의 중요한 인식 근원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생산력을 충분히 발전시키지 않고서도 사회주의 초급단계를 뛰어 넘을 수 있다고 간주하는 것은 혁명발전 문제에 있어서의 공상론이며, 좌경적 착오의 중요한 인식 근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중국의 사회주의는 반식민·반봉건사회로부터 생겨났기에 생산력 수준이 발달된 자본주의 국가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다. 바로 이 점이 중국으로 하여금 반드시 장기간에 걸친 초급단계를 거치면서 여타의 많은 국가들이 자본주의 조건 아래서 실현하는 공업화와 생산의 상품화, 사회화, 현대화를 실현하도록 결정지었다는 것이다.⁷⁸⁾

또한 중국처럼 낙후된 東方의 大國에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은 마르크스주의 발전사에 있어서 새로운 과제라고 한다. 즉, 중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된 기초위에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 마르크스주의 창시자의 전제와 다름 뿐 아니라 기타의 사회주의 국가와도 완전히 다르다. 교과서에 따라서도 안되고, 외국을 따라서도 안된다. 반드시 국가의 실정에서 출발하여 마르크스주의의 기본원리를 중국의 실재와 결합시켜, 실천 속에서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노선을 개척해야 한다는 것이다.⁷⁹⁾

76) 1981년의 ‘역사결의’와 1982년의 胡耀邦의 연설문, 그리고 ‘사회주의 정신문명에 관한 결의’ 내용은 中共 中央文獻研究室編, 十一屆 三中全會以來 重要文獻選讀(人民出版社, 1987), 上冊, pp.294~352, pp.469~525와 下冊, pp.1152~1169에 수록되어 있음.

77) 趙紫陽, “沿着有中國特色的 社會主義道路前進, 人民日報, 1987年 11月 4日 中蘇研究, 11권, 4호 (1987/8, 겨울), pp.245~280에 원역되어 있음.

78) 위의 글, “사회주의 초급단계와 당의 기본노선” 참조.

79) 위의 글.

사회주의 초급단계는 모든 국가가 사회주의로 진입할 때 거쳐야만 하는 최초의 단계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생산력이 낙후되고 상품경제가 발달되지 못한 조건 아래서 중국이 사회주의를 건설해 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특정의 단계를 지칭한다고 한다. 중국이 50년대에 생산수단의 사유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기초를 완성한 때로부터 앞으로 사회주의를 기본적으로 실현할 때까지 최소한 1백년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이 단계에서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모순은 날로 증가하는 인민의 물질 문화적 요구와 낙후된 생산력간의 모순이므로, 현 단계의 주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품경제 발전에 전력하고 노동생산성을 제고시키고 공업, 농업, 국방 및 과학기술 현대화를 점차적으로 실현해야 하며, 또한 이를 위해 생산관계와 상부구조 가운데서 생산력 발전에 적응치 못하는 부분을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⁸⁰⁾

요컨대, 중국의 사회주의 초급단계는 빈곤과 낙후를 점차적으로 탈피하여, 농업국가에서 현대화된 공업국가로 변화해가는 단계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 초급단계는 정치적인 차원에서나 경제적인 차원에서 일반적인 사회주의의 특징,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와 공유제경제, 그리고 노동에 따른 분배의 실시 등을 공유하고 있지만 사회주의의 우수성을 모두 갖춘 그런 사회가 아닌 '미발달된 사회주의 사회'라는 점에서 일반적 사회주의 사회와도 구별되는 것이다.⁸¹⁾ 이런 점에서 모든 사회가 사회주의 초급단계를 거치는 것은 아니며, 사회주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을 만큼 물질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사회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여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게 되는 경우에만 거치게 되는 '특정한 단계'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중국의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는 여러가지 특징이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마르크스주의가 지도적인 지위로 확정된다. 왜냐하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란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원리와 중국의 현대화 건설을 결합시킨 산물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기본노선에서도 마르크스주의는 주요 내용이 되는 것이다. 특히 趙紫陽은 마르크스주의의 史的 唯物論은 원래부터 생산력이 모든 사회 발전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사회주의의 탄생, 사회주의의 어느 단계로부터 다른 단계로의 이행, 그리고 공산주의의 실현에 이르기까지 이들 모두가 생산력의 발전과 유리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개혁과 개방을 견지하는 이유도 그것이 생산력의 발전을 근본적으로 보장해주기 때문

80) 위의 글.

81) 于光遠, "社會主義 初級段階的 經濟," 中國社會科學, 第3期(1987), pp.73~88. 徐謙英, "社會主義 初級段階論과 中國的 社會主義," 「國際政治論叢」, 제29집, 2호(1989), p.290에서 재인용.

이며, 생산력이라는 기준을 이탈하여 추상적인 원칙과 공상적인 모델로써 생활을 판단하게 되면 마르크스주의의 명예를 손상시킬 뿐이라고 한다. 따라서 생산력의 결정적 작용을 인식하고, 생산력이 근본적인 기준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든 경제적 토대와 상부구조와의 모순을 정확하게 처리하고, 생산관계와 상부구조의 변혁을 진정으로 현대 중국의 생산력 발전의 상황과 요구에 적용시켜 주관적인恣意性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⁸²⁾ 이점에서 정통 마르크스의 역사발전 단계론에 근거하여 중국의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즉, 마르크스주의를 중국의 현실과 관련시켜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으로 재해석하고, 나아가 이러한 논리를 '中國式 社會主義'의 주요한 논리적 축으로 이론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둘째, 사회주의의 초급단계에서는 여러 종류의 경제형태가 존재하게 되므로 그에 따른 다양한 사상과 의식형태가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여러 종류의 학설과 관념, 그리고思潮가 공존하게 된다. 셋째,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는 사회주의 상품경제의 발전과 개혁·개방을 추진하려는 사상과 관념상의 개혁이 있게 되므로 의식형태가 부단히 변혁하는 단계이다. 넷째, 초급단계에서는 경직성과 자유화의 경향이 오랫동안 공존하게 되므로 자산계급 자유화사상이 만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중국은 '實事求是의 원칙'과 '실천은 진리검증의 유일한 표준'임을 견지하고, 실제에서 출발하도록 이론과 사상정치교육의 내용과 형식 및 방법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⁸³⁾

2) 中國式 社會主義의 特徵

상기한 바처럼,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처해 있는 중국식 사회주의는 그 근본과제가 생산력의 발전에 있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강조한다.

첫째, 公有制를 주체로 하면서도 다양한 경제구성 요소들의 공존과 발전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자들은 모든 사회주의 사회가 단일한 소유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것은 마치 자본주의 사회에서 私的 所有와 더불어 公的 所有 형태가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적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 사회라고 해서 단일한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이 획일적으로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는 것이다. 더구나 사회주의 사회에서 公有制의 정도와 범위는 사회적 발전 정도, 특히 生産力의 발전과 성숙

82) 趙紫陽, 앞의 글, "중국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 참조.

83) 丁禎彦, 王興富, 商孝才主編, 中國特色社會主義概論(廣西教育出版社, 1988), pp.3~4 참조. 張公子, "中國特色的社會主義와 改革政治," 國際政治論叢, 제30집, 2호(1990), p.272에서 재인용.

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있는 중국에서 公有制 경제만을 강조하는 것은 좌경적 편향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초급단계론자들은 公有制 경제가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私營經濟를 포함한 다양한 소유제형태가 공존·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個體經濟는 물론이거니와 자본주의적인 私有經濟와 合作經濟, 그리고 국가자본주의적 형태의 경제구성요소들이 국유제 및 집단소유제의 경제와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⁸⁴⁾

둘째, 이와 같이 다양한 소유제구조를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公有制 경제부문에 있어서도 所有權과 經營權의 분리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다양한 經營方式을 도입·실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 농촌경제부문에서는 자유시장의 역할을 회복하고 物的 誘因을 확보함으로써 농업생산을 증대시키자는 목적하에 '農業生產責任制'⁸⁵⁾를 실시하여 脫集團化의 추진과 농민들에게 私有地의 폭을 확대시킴으로써 이미 소유권과 경작권의 분리가 실현되었다. 즉, 농토의 소유권은 여전히 집단소유로 남아 있으면서도 개별 농가들에게 15년 이상의 경작권을 허용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경작권의 전매행위까지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개체경제의 영역을 대폭적으로 확대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⁸⁶⁾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全民所有制의 도시기업에 대해서도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하여 경영의 합리화·효율화를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임대·주식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기업들은 보다 많은 재정적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의사결정권이 강화되었다. 또한 국내에서 이러한 과감한 개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經濟開放政策을 추진·확대했던 것이다.

세계,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자들도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이 사회전체의 소유가 되며 사회전체가 하나의 경제적 주체가 되어 계획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지고 상품과 화폐가 사회에서 사라진다는 것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은 아니나, 현 단계의 중국의 경우는 '계획경제적인 상품경제'의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1984년 10월

84) 光明日報, 1987年 6月 29日, 徐鑣英, "社會主義初級段階論과 中國의 社會主義," pp.290~291에서 재인용.

85) 生產責任制는 인민공사의 하부조직인 생산대에 속해 있는 개별농민이나 自願農民으로 구성된 특별한 작업집단이 생산할당량과 보상에 관하여 생산대와 계약을 맺는 제도이다. 이는 종래의 집단노동에 의한 과업목표달성 방식에서 가족 내지는 소작업집단에 의한 자발적 영농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농가별청부제인 '包產到戶制'와 경영농가별청부제인 '包幹到戶制'가 있다. Chu-yuan Cheng, "Economic Reform in Mainland China: Consequences and Prospects," *Issues & Studies*, Vol.22, No.12 (Dec. 1986), pp.16~17 참조.

86) 徐鑣英, "鄧小平體制的 農村經濟政策," 亞細亞研究, 27:2(1983), pp.89~106 참조.

에 열린 中國 共產黨 제12기 3中全會에서 도시 기업부문의 발전을 꾀하기 위한 전반적인 개혁정책으로 채택된 '關於經濟體制改革的決定'에서 중국의 특색을 갖추고, 생기와 활력으로 가득찬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수립하며 사회생산력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을 기본 임무로 천명하고 다음과 같은 개혁추진을 목표로 내세웠다. ① 기업의 활력증진을 위한 기업자주권의 확대와 노동자의 주인으로서의 지위 보장, ② 가치법칙을 고려하여 운용되는 계획체제에 입각한 사회주의 상품경제의 발전, ③ 자유가격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합리적 가격체제의 수립, ④ 각급 정부가 기업을 직접 경영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정부와 기업의 직책분리, ⑤ 경제책임제의 확립과 노동에 따른 분배원칙, 즉 공장장 책임제의 시행, 노동조합조직과 근로자의 대표가 기업의 중대한 결정과 행정에 대한 감독 및 평균주의 사상의 불식, ⑥ 대외적 경제기술 교류확대, 즉 대외개방을 장기적인 기본국책으로 하여 대외경제·기술교류와 합작규모의 적극 확대, 경제특구 및 연안항구도시 개방 확대, ⑦ 당의 영도를 강화하여 개혁의 순조로운 진행보장 등이다.⁸⁷⁾

여기에서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자들은 계획경제와 상품경제를 대립적으로 사고하는 과거의 도식적 견해를 비판하고, 중국식 사회주의의 특징을 '공유재물 주체로 한 계획적 상품경제의 발전'이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초급단계론자들은 그동안의 지령성 계획을 위주로 한 경제에 대한 직접관리 방식을 지양하고, 지도성 계획경제로 전환함으로써 '국가가 시장을 조절하고 시장이 기업을 유도하는' 간접관리의 방식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자들은 계획경제의 틀 안에서 시장·분업·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개인 및 기업의 경제적 동기부여를 확대하여 고급화된 '사회주의 상품경제'를 확립·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주의 상품경제'란 진정한 價値의 法則(the law of value)에 입각하여 생산되고 교환될 수 있도록 계획경제의 부분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것이다.⁸⁸⁾ 즉 개인과 집단은 그들이 창출한 가치만큼 응분의 댓가를 받아야 하며 모두 함께 한 숯의 밥을 다 먹어버리는 '炮大鍋飯'의 불합리성을 지양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경제적인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기업의 자율권을 보장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기도하고, 당과 기업, 정부와 기업을 분리함으로써 기업이 당과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 계획·생산 및 분배에 있어 자유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격결정에 있어 價値의 法則을 인정할 경우에는 이는 곧 시장의 역할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며, 따라서 국가의 가격결정권을 약화시키고 경제적

87) "關於經濟體制改革的決定," pp.263~286 참조.

88) Kent M. Wiedemann, "China in the Vanguard of a New Socialism," *Asian Survey*, Vol. XXVI, No.7 (July 1986), p.784.

탈중앙집권화의 길을 마련해주는 것이다.⁸⁹⁾

따라서, 이러한 '중국식 사회주의'는 價値의 法則에 입각한 '社會主義 商品經濟'를 추구 하고 있는 바, 이는 生産力의 급격한 발전을 목적으로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제한적으로 활성화하고, 기업을 중심으로 경제하부 단위의 자율성을 제고시키며, 국가계획과 민생에 관련된 중요한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지령성 계획을 실시하지만 기타의 경제활동(일부 농산품, 일용상품 및 서비스 등의 용역활동)에 대해서는 지도성 계획 또는 완전한 시장조절을 실시하는 '계획경제적 상품경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생산수단의 공유원칙을 고수하며 자원배분면에서 국가의 계획기능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와는 구별된다. 이 두가지 기본성격이 사회주의경제체제를 유지하는 안전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네째,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자들은 분배에 있어서 평균주의적 경향을 비판하고, 노동에 따른 분배원칙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파생하는 소득의 불평등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共同富裕'의 이상을 추구하면서도 '일부지역·일부계층이 우선적으로 富裕해 지는 것'(先富)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⁹⁰⁾

더구나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중국식 사회주의'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多種經濟, 多種經營이 발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노동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자본과 자금이윤으로부터 나오는 소득부문이나 경영이윤에서 파생하는 비노동수입의 합법적인 지위를 인정해야 하며, 부분적으로 잉여노동의 착취라든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부활문제에 대해서도 과거와 같이 교조적인 태도를 견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⁹¹⁾

상기한 바의 특징을 갖고 있는 중국식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의 계획경제를 '主'로 하고 시장경제적 요소를 '從'으로 하는 '계획경제적 상품경제'이기 때문에 엄연히 사회주의를 실천하는 것이고, 모든 생산수단은 여전히 공유화되어 있고, 착취계급의 등장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개인과 기업을 물질적 유인으로 자극하는 것이 하등 사회주의 추구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한다.⁹²⁾

요컨대 鄧小平體制가 지향하는 이데올로기는 '社會主義商品經濟'라는 새로운 모형의

89) *Ibid.*

90) 李君如,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평등개념에 대한 시론," 中蘇研究, 제12권, 제4호(1988/89 겨울), pp.205~211 참조.

91) 徐鎮英, "社會主義初級段階論과 中國의 社會主義," p.292.

92) 유세희, 앞의글, p.35.

‘중국 특색을 지닌 社會主義’를 창출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이는 곧 대규모 生産手段을 국가가 소유하여 자원배분면에서의 전국적인 계획경제를 실시한다는 점에서는 社會主義的이라 할 수 있으나, 生産力의 발전을 위해 자유시장 경쟁원리에 따르는 생산, 분배와 이윤제도를 크게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共產主義 典型에서 크게 벗어난 ‘中國式 社會主義’의 새로운 모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중국식 사회주의’ 노선은 경제건설(現代化)을 중심으로 4개 기본원칙과 개혁·개방을 전지한다는 ‘1中心(現代化) 2基本點(4項堅持原則 고수와 개혁·개방)’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⁹³⁾ 鄧小平體制의 중국식 사회주의는 그것이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한 毛思想이나 마르크스주의와의 결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마르크스이론을 수정하면서 자본주의 요소를 대폭 수용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모택동사상의 전통을 그대로 지켜 나가려는 이른바 ‘經濟反左·政治反右’의 정책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鄧小平體制는 四項基本原則이 생산력 발전을 근본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改革·開放이 속박받는 생산력을 해방시키는 역할을 그 기본적인 임무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양자간의 상호 조화와 보완을 강조하고 있다. 그 결과 ‘中國式 社會主義’는 경제분야에서 극좌적 경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經濟反左’, 정치분야에서 우경으로 치닫는 것에 반대하는 ‘政治反右’, 당내 당권의 조직과 생활에 있어 극좌적 경향을 극소화하기 위한 ‘黨內反左’, 당의 일반인들의 자유 민주의 요구, 즉 자산계급의 자유화 경향을 반대하는 ‘黨外反右’라는 조합적이고 동적인 성격을 갖게 된 것이다.⁹⁴⁾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국식 사회주의’의 두가지 중심 내용인 經濟的 改革·開放과 政治的 四項基本原則이 내포하고 있는 對立성과 衝突性이다. 이 양자간의 모순성은 중국식 사회주의의 이론화 과정과 개혁정치의 실제 전개과정에서 지도부의 인식을 분열시키는 중심 쟁점이 되어 왔던 것이다. 그것은 6·4천안문 사태나 최근의 동구·소련의 개혁을 보는 관점에서도 큰 차이를 노정시키고 있다.

93) 趙紫陽, 앞의 글, “사회주의 초급단계와 당의 기본노선” 참조; 堅持四項基本原則은 社會主義道路의 堅持, 無產階級專政堅持, 共產黨領導堅持, 마르크스·레닌主義·毛澤東思想堅持를 말한다. 鄧小平文選(1975~1982)(北京:人民出版社, 1983), pp.144~170 참조.

94) 金達中, “中國의 改革政治와 이데올로기,” 한국 사회주의체제연구협의회 1991년도 연차학술회의 발표논문, p.11 참조.

4. 中國式 社會主義의 展望

생산력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中國式 社會主義는 경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1984~88년 기간 동안 매년 평균 11.1%의 경제성장을 기록했으며, 국민소득도 매년 10.7% 증가되었다. 같은 기간 동안 농민 임금은 매년 8.6%, 도시 노동자 임금은 6.3% 상승하였다.⁹⁵⁾ 이 결과 1988년 국민총생산이 1950년의 약 12배 정도인 3,780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국가 소유의 산업용 고정자산은 1949년의 무려 126배에 해당하는 5,410억 달러로 신장되었다. 대외무역 규모 역시 엄청난 증가율을 보여 수출입 총액의 경우 1988년에 처음으로 1천억 달러를 돌파하여 1,02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1988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9%, 통화팽창률을 30%, 그리고 405억 달러의 외채를 유발시킴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시키기도 했다.⁹⁶⁾

더우기 개혁은 사회 전반에 배금주의를 만연시켜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심하게 나타났으며, 계층간의 소득 불균형과 지역간, 산업간의 불균등발전과 같은 심각한 정치·경제·사회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러한 소득 격차와 불균형은 '빈곤의 평등'이 야기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이 취한 경제개혁 조치, 즉 소유·경영제도의 다양화, 경제 활동에 대한 결정권의 지방분권화, 그리고 노동에 대한 물질적 유인의 허용 등이 초래시킨 불가피한 현상이었다.

이와 같은 지역간, 계층간, 직업간 소득 격차는 1980년대 후반에 중국 인민들로 하여금 자기 이익 추구를 위한 조직화를 적극화시켜, 중국 사회에 새로운 多元主義 現狀을 노정시키게 되었다.⁹⁷⁾ 이처럼 개혁·개방이 초래한 경제·사회 부문의 변화는 사회적 이익과 요구의 多元化로 이어졌고, 이것은 급기야 四項基本原則과 共產黨의 권위 및 정통성에 대한 지식인의 도전과 民主的 價値와 競爭的 政治體制의 도입 요구로 이어졌던 것이다.

1989년에 발발한 6·4 天安門事態는 이러한 10년간의 개혁 과정에서 노정된 제반 부작용, 즉 인플레이와 유통질서 혼란, 불균형 발전 논리와 차등분배 확산에 따른 지역간·계층간의 소득격차, 건국이후 계속 누적되어 온 각종 봉건병폐와 심화된 관료주의, 당정기능 분리 및 세대교체의 부진 등 政治改革이 經濟改革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불만,

95) Lowell Dittmer, "China in 1988: The Continuing Dilemma of Socialist Reform," *Asian Survey*, Vol. XXIX, No.1 (January 1989), p.18.

96) *Beijing Review*, Vol.32, No.40 (October 2-8, 1989), pp.29~34 참조.

97) John P. Burns, "China's Governance: Political Reform in Turbulent Environment," *The China Quarterly*, No.119 (September 1989). 金連中, 앞의 글, p.26에서 재인용.

그리고 이들 모순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과 학생·언론인 등 대다수 지식인들의 회의감과 비판의식 등이 복합되어 나타난 것이었다.⁹⁸⁾

6·4천안문 사태 발발의 핵심적 요인은 經濟改革과 관련하여 아래로부터 제기되는 政治的 民主化 요구와 관련되었다. 즉, 사회주의 초급단계하에서의 政治改革이라는 上部構造의인 問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중국 지도부와 대학생 등 지식인들간의 인식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었다.

鄧小平의 집권 이후 經濟改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4인방 추종세력 이외에는 중국 지도부내에 異見이 없었다. 그러나, 그 경제개혁의 범위와 특히 이와 관련하여 정치개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수파와 개혁파로 양분되어 권력투쟁의 양상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보수파는 소극적인 경제개혁과 정치개혁의 유보를 표명한 반면, 개혁파는 적극적이며 대폭적인 경제개혁과 이를 위해서는 과감히 정치개혁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黨의 領導는 정치에만 국한되어야 하며, 따라서 국가정권기관, 기업과 사업단위 및 대중단체로부터 당조직을 최대한 철수시켜 이들 조직의 自主權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물론 급진개혁파라 불릴 수 있는 소수의 지식인 엘리트들은 共產黨 一黨獨裁 포기를 주장하고, 서구식의 政治的 多元主義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胡耀邦의 추모집회를 위해 천안문 광장에 집결한 대학생들은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공격하였고, 이는 물가등극로 생활의 위협을 받았던 도시 노동자와 지식인 계층의 동정과 지지를 받으면서 확산되었고, 부정부패 척결 요구는 필연적으로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민주화 요구에 대해 鄧小平은 결국 보수파와 합세하여 학생들의 시위를 '共產黨의 領導와 體制를 부정하는 계획된 음모'⁹⁹⁾로 보고, 反革命暴亂으로 규정하여 학생들의 시위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던 개혁파의 대표인 趙紫陽을 총서기에서 해임하고 후임에 中道 지향적인 江澤民을 임명했던 것이다.

天安門 事態 이후 鄧小平體制는 국정운영의 핵심을 社會主義 견지하의 안정 확보에 두었다. 정치영역에서 사회주의와 공산당 통치의 기본 원칙을 강조하여, 사회주의 이념과 가

98) 천안문사태에 대한 분석은 다음 참조. Lucian W. Pye, "Tiananmen and Chinese Political Culture: The Escalation of Confrontation from Moralizing to Revenge," *Asian Survey*, Vol. XXX, No.4 (April 1990), pp.331~359; Lowell Dittmer, *China in 1989: The Crisis of Incomplete Reform*, *Asian Survey*, Vol. XXX, No.1 (January 1990), pp.25~41.

99) 人民日報, 1989年 4月 26日字 참조; 천안문사태의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金達中, 앞의 글, pp.28~35 참조.

치에 대한 선전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언론 통제와 毛澤東思想의 학습을 강조하는 한편, 서방세계의 사상, 문화, 정신적 침투를 방지하는 3반투쟁과 반자산계급자유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경제영역에서도 보수파가 강조하는 '治理·整頓' 정책을 강력히 실행하여 경제에 대한 중앙의 계획성과 통제성을 강화하였다. 즉, 국가계획위원회의 감독과 기능을 강화하고 부처간의 협의와 조정을 꾀하기 위한 생산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거시·미시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각 경제조직내에 당 기능을 강화했던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개혁·개방을 포기한 것은 아니나, 4項基本原則의 견지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천안문 사태가 중국식 사회주의에 가한 내적 충격이었다면, 베를린 장벽의 와해를 기점으로 시작된 동구와 소련의 사회주의권의 변화는 중국 지도부에 강타한 외적 충격이라고 할 수 있다.¹⁰⁰⁾ 양자는 충격의 근원(국내와 국외)이라는 측면에서는 상이하나, 충격의 효과면에서는 동질성을 보여준다. 특히, 사회주의권의 변화는 중국 지도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 바, 그것은 첫째, 黨內 結束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즉, 보수파든 개혁파든 공산당원이라는 동일한 구성원으로서 '전체로서의 공산당의 존속'이라는 공동의 가치 보존을 위해서는 같은 이해관계에 있으며, 黨과 생산존망을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사회주의권의 변화가 천안문 사태의 무력 진압 조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동구 및 소련의 변혁은 단순한 개혁의 차원이 아니라 자본주의 침투에 의한 체제 붕괴였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천안문 사태 역시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와 공산당의 와해를 획책한 자산계급 세력의 음모였다는 논리를 정당화해주어, 이에 입각한 광범위한 대내선전이 설득력있게 전개될 수 있다.

아름든 사회주의권의 변화 충격은 중국 지도부로 하여금 중국식 사회주의에 있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공산당의 영도를 강조하는 이른바 4項基本原則의 견지하에서의 부분적인 개혁과 개방이라는 보수파의 방침을 더욱 더 고수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년 8월 소련의 보수파에 의한 쿠데타 실패이후,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資產階級自由化, 經濟市場化, 政治多元化 및 군대에 대한 당의 지배를 반대하는 軍隊國有化 등 이른바 '新四化路線'을 사회주의 노선의 현 중국 정권을 위협하는 당면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권한을 가진 工作小組를 당내에 조직하기로 결정했는 바,¹⁰¹⁾ 이는 현 중국

100) 천안문사태와 사회주의권의 변화가 중국 정치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은 다음 참조. 全聖興, "13期5中全會'以後의 中國政治," 統一問題研究, 제3권, 3호(1991년 가을), pp. 292~322.

101) 東亞日報 1991년 8월 13일자 참조.

지도부의 심각한 위기의식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鄧小平 후기체제라 할 수 있는 현 중국 지도부는 대외적인 고립을 피하기 위하여 천안문 사태시의 정치범을 석방하는 등 서방측과의 화해 재스처를 보이고 있으나, 상기한 자본주의 침투에 대한 대내외적인 위기의식으로 인해 그 개방의 폭은 단기적으로는 대단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 단계의 '中國式 社會主義'는 政治的인 면에서 4項基本原則의 견지를 고수하는 한편, 經濟的인 면에서 社會主義體制가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부분적으로 資本主義的 要素를 수용하여 改革·開放을 추구해 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노선은 로벤탈(Richard Lowenthal)이 예견한 바처럼 사회주의적 유토피아와 발전이라는 딜레마에 계속 직면할 것이다.¹⁰²⁾ 즉,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체제는 초기 혁명기를 지나 혁명 관리기에 들어서면 사회주의적 유토피아를 너무 강조하면 발전이 안되고, 발전으로 치중하다 보면 사회주의 이념과는 점차 멀어져버리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딜레마는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자본주의적 요소를 수용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하려는 '중국식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에서 오는 필연적인 딜레마이며 한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V.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의 현황과 전망

1. 내외환경의 변화와 개혁의 필요성

지난 9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남북한의 UN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은 한반도에 두 정치적 실체가 존재함을 국제사회가 인정함을 뜻하며 남북한에 대한 동시 수교는 빠르게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한반도에 공존의 시대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이 남북 상호간에 안정과 공존의 틀을 제시하고 있음은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 가능성을 함축한다.

최근 북한은 그동안 주장해 온 남북한 단일의석 유엔 가입안을 철회하고 금년 가을에

102) Richard Lowenthal, "Development vs. Utopia in Communist Policy," Chalmers Johnson,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 pp.33~110 참조.

유엔에 가입했다. 또한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핵안전협정체결 의사가 있음을 공식 통보했으며 필리핀 정부와 관계개선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지난해 시작한 일본과의 수교 교섭과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기 위해 북경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과의 접촉 등과 함께 북한 대외정책의 새로운 변화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대외정책의 변화는 북한이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어려운 경제사정의 타개 그리고 새롭게 구축되고 있는 세계정세에 적극 적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89년부터 일기 시작한 동구 공산정권의 붕괴와 '90년도에 이루어진 동독정권의 서독에의 흡수 등의 사태에 대단히 방어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 북한은 외부의 변화 압력에 대해 '우리식대로 살자'는 전략을 내세워 대응해 온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의 변화를 '우리식대로 살자'식의 대응으로 이들 되받아치기에는 북한에 밀려드는 경제 및 외교적 도전이 너무 벅찬 것이 되었다. 소련을 위시한 동구국가들이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한국과의 수교러시는 북한의 외교적 고립현상을 확대시켰다.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과 노태우대통령 사이에 있는 제주도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강력한 우방인 중국도 한국과의 수교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태도변화를 보이고 있어 북한은 이에 적극 대응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소련의 내부사정으로 인한 소련-북한사이의 경제적 관계의 변화 역시 북한에게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련은 금년부터 그동안 행해온 석유공급에 대해 상계대업방식에서 현금결제 즉 국제사회에서 통할 수 있는 태환성 경화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태환성 경화의 부족으로 소련으로 부터의 석유 공급이 거의 안되고 있어 북한의 에너지 사정은 지난해에 비해 50%나 악화되어 있다. 이로 인해 생산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소련은 그동안 북한의 대외경제 파트너로 59%를 점하고 있었는데 이제 형제국으로서의 지원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연결고리로 새로운 파트너를 만들어야 하는 처지에 있게 되었으며, 그 대상을 일본으로 보고 조·일수교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다양한 채널로 접촉을 확대하는 것도 이 문제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밖에 '80년 이래 연평균 3%의 낮은 성장에 머물다가, 작년에는 -3.7%의 성장을 나타내는 등 어려운 북한의 경제사정은 김정일 승계체제의 확립을 위한 주민들의 지지기반을 약하게 만들고 있다.¹⁰³⁾ 침체에 빠져있는 북한경제가 벗어나기 위해서

103) 북한경제의 실상에 대하여서는 다음의 글을 볼 것. 연하청 "북한의 개방전망과 남북한경제협력", (서울: 대통령자문 21세기위원회 1991.8) 및 통일원, "1990년도 북한경제종합평가" (1991.8)를 볼 것. 1990년 기준 북한의 GNP는 231억달러이었으며, 한국의 GNP는 2,379억달러이었다.

는 서방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개방 이외의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북한은 놓여 있다.

국제질서의 탈 냉전화와 동북아시아의 데당뜨흐름 역시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될 새로운 도전현상의 하나이다. 양극체제의 준일극화(emergence of a quasi-unipolar system), 경제력의 다극화, UN을 위시한 국제기구의 활성화, 냉전적 이데올로기의 쇠퇴경향 등으로 보여지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은 지구상의 어떤 국가도 '홀로 서기'식의 대외정책을 추진함은 1990년대의 로빈스크루스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세계질서는 동북아시아의 기존 흐름에 영향을 가해 새로운 추세를 보여주게 하고 있다. 제주도에서의 한·소 정상회담이 상징해주고 있는 탈 냉전화는 동북아의 정치 및 경제질서가 변화하고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 아직 새로운 동북아시아의 정치, 경제체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띠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으나 그 기본 방향은 상호 번영을 위한 국가간의 협력과 교류의 확대임에 틀림없다.

현재 거론되는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과 경제공동체 움직임은 바로 이러한 새질서의 형성이 이미 시작됐음을 뜻한다.¹⁰⁴⁾

북한은 지난 '89년대부터 주체사상의 질적 변화아래 선택적 개방화를 통해 내외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1989년부터 시작된 소련과 동구의 대변혁과 냉전체제의 종식은 북한의 이러한 노력을 무력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회주의권의 대변혁이 외부의 힘에 의해 무너져 가는 것이 아닌 내부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북한의 지도층은 개혁의 문제를 심각히 여기게 된 것이다.

2. 북한의 선택적 개방화와 개혁문제

북한은 분단과 전쟁직후의 낙후된 농업사회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화의 초기단계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추진한 외연적 경제성장은 경지정리, 노동집약적 공업, 채취산업 등에서 괄목할 만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1960년대까지는 총량규모에서 한국의 국민총생산을 앞지룰 수 있었다.

1970년대 제2단계 산업화에 들어선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들 보다 월등히 나은 서방국가

104) Stephen Haggard "The Political Economy of East Asia after the Cold War",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와 제주국제협회의가 주최한 "평화와 번영의 제주" 국제학술회의 (1991.10.25~26).

들의 기술과 자본이 필요함에 인식하게 되어 이의 도입을 피하게 되었다. 또한 1973년의 석유파동을 전후하여 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서방 무역적자확대로 이들 나라로부터 경제지원을 제공받기 어려운 점이 계기가 되어 서방과의 경제협력을 모색했다.¹⁰⁵⁾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서방자본의 직접투자나 기술협력에 의한 것이 아닌 차관의 형태를 나타냈다. 그러나 지불능력을 넘어선 무리한 차관도입과 서방으로부터의 수입확대가 외채를 누적시켜 1970년 중반 이후 북한은 외채지불연기 사태를 맞게 되면서 서방으로부터의 차관에 대한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그 이후 북한은 자력갱생원칙에 토대를 두면서 중국과 소련으로부터의 불충분한 경제지원에 다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은 197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대외경제개방정책에 힘입어 1984년에 들어서면서는 대외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다.

1) 합영법의 제정 및 추진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난 것은 1984년 1월 25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7기 3차회의에서 대외경제정책방향을 크게 수정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정무원 총리 姜成山은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켜야 경제건설의 촉진과 인민생활향상이 가능하며], [나라의 친선관계발전은 흔히 무역을 비롯한 경제협조로부터 시작되며 경제협조를 널리 발전시켜야 다른 나라들과 가지고 있는 친선유대와 정치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다]고 하여 대외경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강성산은 계속해서 수교국인 구라파지역의 사회주의국가와 기술교류와 경제합작을 추진하며 비수교 자본주의국가와도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켜 상호이익 원칙하에 경제교류와 협력을 추진한다 하였는데 이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와의 관계개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하겠다.

경제합작을 외국의 경제적 예측이라고 보아 온 북한이 경제합작과 기술협조를 공식적으로 표명함은 해외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북한경제를 개방화하겠다는 것으로서 커다란 변화가 아닐 수 없었다. 특히 이 시기를 전후해서 김일성, 김정일, 강성산을 비롯한 북한의 고위관리들이 중국의 개방화현장을 빈번히 시찰하기도 했다.

이러는 가운데 북한은 외국과의 경제기술교류 및 합작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合營法을 1984년 9월 8일에 제정·발표했다.

중국이 개방을 통한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1979년 7월 1일 제정한 中外合資經營法에

105) 이태욱, "북한경제개혁과 전망", 이태욱편, 북한의 경제(서울: 율유문화사, 1990), p.252.

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合營法은 폐쇄경제체제상에서 오는 모순으로 인한 제2차 7개년 계획(1978~84)의 실패를 인정하고, 차기경제개발의 수립 및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외개방으로 해외기업의 직접투자유치, 전문기술 및 경영기법 이전을 도모하고자 착안된 것이다. 북한은 이 조치에서 서방의 적극적인 투자 및 기술을 유치하기 위하여 중국의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보다 투자조건을 상당히 완화시키고 있다.¹⁰⁶⁾

북한이 경제발전을 위해 대외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유독 외국기업과의 합영사업에만 중점을 둔 것은 정치적 의미가 크다 하겠다. 합영사업은 경제구조를 일부 개편하거나 주민들을 사상적으로 오염시키지 않고도 해외선진자본기술과 자본을 도입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고 따라서 합영법을 제정 공포한 이래 북한은 합영사업에 주력해 왔다.

북한의 발표에 의하면 합영법 발표 이후 지금까지의 합영사업실적은 모두 64건으로 이중 절반이 일본조총련계 상공인과의 합작투자다. 나머지도 소련, 중국, 몽고 등 공산권 국가나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친북한국가들과의 합작이 대부분으로 북한이 바라는 서방국가들의 기술이나 자본의 유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한의 연도별 합영사업 유치실적을 보면 1988년까지는 매년 10건 안팎에 내용도 의류, 식품, 가공, 식당건설 등 서비스, 경공업분야에 국한되었으나 1989년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금융, 전자, 화학분야로 질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북한은 1988년 12월에 정무원 산하에 합영공업부를 설치하고 외국기업 유치에 노력했으나 서방국가들의 기업과의 합영전망은 그리 밝지가 않다.¹⁰⁷⁾

이와 같이 북한의 대외개방화정책을 대표하는 합영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원인은 개방을 뒷받침할 경제체제에 대한 개혁을 실용주의 노선에 입각·실시하면서 대외개방화정책을 추진한 중국과는 달리 북한에는 자력갱생의 자립경제정책과 구조에 대한 개혁없이 선택적·부분적 개방화를 추진하려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개방정책은 중앙집권적 명령체제에서 시장사회주의로의 분명한 방향전환을 보여주고 있는 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북한은 사회주의경제의 기본적 교리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은 범위에서 개방을 추진하니 그 성과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왜 경제체제의 개혁과 그에 따른 본격적인 대외개방화를 주저해왔는가? 북한의 지도층은 경제체제개혁과 경제개방화가 자주와 자립을 강조하고 자신의 사회를 '지상

106) 신승철, "개혁·개방 그리고 합영법", 앞의 책, pp.230~231.

107) 김세원, "대외경제관계와 딜레마", 최명편, 북한개론(서울: 울유문화사, 1990), pp.193~194. 지난 1990년 5월 정무원조직개편시 합영공업부는 폐지되고, 대외경제사업부내 합영총국으로 바뀌어졌다.

낙원'으로 여겨 온 북한 인민들에게 비쳐질 외부세계의 모습과 자신들의 객관적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미칠 영향을 두려워 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40여년 동안 내외의 큰 도전없이 안정적으로 김일성체제를 유지해왔는데 그 근본 요인은 폐쇄정책, 주민통제, 주체사상의 김일성주의화 등의 장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체제개혁과 본격적인 개방화조치는 이러한 메카니즘의 약화 내지는 무력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 개혁의 촉진요인과 제약요인

북한은 지금까지 유지해 온 김일성체제와 김일성주의를 유지하면서 제한적인 대외개방을 실시해 왔다. 북한이 고르바초프가 추진하는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를 병행하지 않고 부분적인 글라스노스트를 선택한 것은 경제의 어려움을 인식하지만 체제개혁과 개방은 김일성주의(주체사상)에 대한 오염, 주민의식의 국제화를 가져와 동구에서와 같은 체제에 대한 개혁요구가 밑으로부터 거세게 일 것이라는 불안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페레스트로이카가 전제되지 않는 글라스노스트로는 경제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체되었다. 합영법을 채택한 후에도 서방세계로부터의 자본과 기술의 유입이 거의 성취되지 못하고 있으며, 과중한 군사비로 인해 북한주민의 의식주 생활은 매우 낙후되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¹⁰⁸⁾ 소련의 개혁과 주간지인 [아르구멘티이 파크티](論據와 事實) 최신희도 [北朝鮮-傳説과 現實]이라는 기사에서 "북한은 식료품과 의료 및 기타 가장 기본적인 물자의 결핍으로 주민감정에는 점차 불신과 불안 및 피로가 쌓이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러한 위기를 방치하면 어떤 결과가 될 것인지는 루마니아 차우세스쿠 정권의 예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북한경제는 경제체제에 대한 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성장을 해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북한은 현재 국제관계가 탈이념-협력의 차원으로 전이되고 있으며, 또한 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국가들의 탈공산주의 흐름에 적응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깊은 동맹관계에 있는 소련과 동구권의 개혁과 개방 그리고 민주화에 대해 외면하고 빗장을 걸어 잠그는 식의 대응으로는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다. 최근 소련은 그동안의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 북한으로 하여금 개혁에 나서도록 강력히 촉구하기 시작했다.¹⁰⁹⁾ 또한 소련은 북한이 90년 9월초 평양에서 개최된 소련-북한 외무회담내용을 비망록 공개를 통해 그 동안의 한국과의 접근에 대해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1일 한국과의 수교

108) 조선일보 1990년 9월 21일, "모스크바유학 북한대학생 수기"

109) 최근의 예는 세바르드나제 소련외무장관이 지난 9월 2일 북한을 방문한 사실을 들 수 있음.

라는 새 시대를 열었다. 중국 역시 천안문사태로 주춤한 상태지만 체제유지를 위해서도 개혁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체제가 위기적 도전을 내부에서 받지 않는 선에서의 개혁을 북한에 권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도 북경아시안게임 이후 무역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해 나가고 있다.¹¹⁰⁾ 소련과 중국은 경제발전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필수적으로 여기고 있으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접근을 이루어 양국이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

북한사회도 국제화의 조류 속에서 차츰 외부세계에 노출되고 있어 외부세계와 완전 차단한 폐쇄사회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북한의 지도층, 외교관 그리고 소련과 동구에서 유학한 학생들은 국제사회에서의 상호의존경향과 소련 및 동구의 변혁 그리고 한국의 발전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다.¹¹¹⁾ 북한 주민들도 개방화에 따라 점증하는 방문객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부분적이나마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와 외부 사상이 유입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방문인사들에 의하면 사회주의권의 혁명적 변화와 남한의 상대적 성공에 대한 인식이 주민들 사이에 스며들고 있다고 한다.¹¹²⁾ 이에 따라 북한주민들은 북한사회의 부정·부패에 대단한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에서도 기성세대의 세계관과 생활관을 그대로 따르지만은 않는 전후세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세대가 직간접의 경험을 통해 북한을 둘러싼 주위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 새로운 세상이 탄생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개혁과 개방을 통해 북한을 더욱 발전된 산업사회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드높일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또한 북한은 지금 한국과의 정치·경제·과학·외교 등 모든 면에서 체제경쟁을 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198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부터 경제적으로 선진국들도 무시할 수 없는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고, 정치발전면에서도 6·29이후 민주화의 길을 걷고 있어 40여년간의 김일성 일인장기집권과 권력세습의 길을 걸어온 북한보다 앞서고 있다. 한국은 또한 88서울올림픽 이후 북한의 우방인 동구 대부분 국가들과 수교를 맺었다. 이제 소련과의 공식관계를 수립했고, 중국과의 관계도 북경아시안게임 이후 무역사무소 설치와 수교교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북한은 한국과의 대결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110) 鄭鴻業,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의 기자회견(1990.9.29)", 조선일보 1990년 9월 30일.

111) 김연수, "북한에서의 열흘" (1), 조선일보 1990년 9월 22일.

112) Gray Klintworth, "Pyongyang Perestroika",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90년 7월 12일, pp.21~22.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은 앞으로 한국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체제개혁과 개방의 길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체제에는 개혁을 촉진하는 요인 못지 않게 개혁을 제약하고 장애가 되는 요인들도 있다. 우선 주체사상(또는 김일성주의)과 수령론을 들 수 있다. 주체사상에 의하면 사회주의건설에 있어 물질적 자극을 위주로 하고 정치 도덕적 자극을 부차적으로 합은 근로자들 사이에 이기주의를 조장하고 그들을 돈이나 물질에 매달리게 하여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부식시키는 매우 위험하고 위태로운 편향이라고 비난하고 있다.¹¹³⁾ 이는 정치도덕적 자극(즉 사상개조)에 의해 사회주의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중국의 실용주의나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나아가서 시장사회주의적 입장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수령론은 사회주의건설의 주체인 당과 인민위에 수령의 유일적 영도가 결부되어야 비로소 바람직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령론은 북한체제내에 극도의 개인숭배사상을 발전시켜 북한내에는 김일성 일인의 사상과 리더십에의 의존도가 극대화 되어 있다.¹¹⁴⁾

따라서 북한을 <김일성의 공화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김일성은 북한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존재로 절대화되어 있다. 수령론은 개인숭배를 극복하고 민주화와 공개성의 원칙을 통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정치개혁의 방향에서 보면 비민주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주체사상과 수령론은 복잡한 내외환경에서 김일성체제라는 북한사회주의를 형성·유지해오는 데는 기여했으나 이제 체제개혁을 하려 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는 지금까지의 사회주의 체제개혁이 현실적으로는 체제의 활성화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더욱이 개혁을 시도한 지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는 즉각적인 가시적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결국 철저한 급진적 개혁의 요구에 직면했다. 소련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포기하고 자본주의를 선택하는 탈사회주의 노선을 택하게 되었다. 그 결과 소련은 해체내부에서 개혁문제로 보수·진보의 갈등을 겪게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구태타의 실패로 지난 8월이후 소련은 체제국면에 들어가 있다. 중국은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추진하다 천안문사태라는 체제위협적 상황을 가져왔다. 이러한 사회주의 체제개혁의 불투명한 전도는 북한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노선에 더욱 집착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13)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국토통일원, 김정일명예의 논문·담화(1987) pp.125~126.

114) 이종석, "북한정치경제의 현실과 변화의 조건", 사상문예운동, 1990년 봄 (3호), pp.320~328.

세계로는 동구권과의 수교에 이어 소련과의 관계정상화를 가져온 한국의 북방정책을 들 수 있다. 장기적으로 사회주의권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는 한국의 북방정책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 그리고 남북대화를 촉진하는 동인이 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의 북한 동맹국가들과의 수교노력은 북한체제의 붕괴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하겠다. 한-소 수교에 즈음하여 북한이 소련에 대한 비망록 공개 과정에서 드러내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독일식 통일 가능성에 대한 우려 내지는 공포감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¹¹⁵⁾

3. 북한식 개혁의 현황

그렇다면 현재 북한체제는 어떤변화의 길을 가고 있고 전망은 어떠한가?

우선 현재 진행중인 동구에서와 같은 변혁은 기대하기 어렵다. 동구는 소련의 군사력에 의해 소비에트체제를 강요당하기 전에는 서구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적 전통을 지니고 있었던 반면에, 북한은 집단주의 내지는 전체주의적 문화에 익숙해 있어 그렇지 못하다. 또 소련과 동구와의 관계가 종속적이었다면 북한은 이미 소련의 예측에서 벗어난 지가 오래 되었다. 북한은 폐쇄정책을 통해 외부로부터의 정보를 단절시켜 인민의 욕구분출의 심리적 동기마저 마비시키고 있으며, 관제집단을 제외하고는 인민에 의한 개혁운동을 이끌어 갈 어떤 지식인 집단도 없다. 따라서 북한체제의 변화는 밑으로부터의 변혁이 아니고 위로부터의 개혁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소련의 경우와 같이 통치자와 공산당이 지속적 지배를 위해 주민의 요구를 앞질러 수용하는 전술적·능동적 개혁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변화는 언제 일어나고 어떤 모습을 띠는 것인가? 북한체제의 변화시기에 있어서는 국내의 견해를 대체로 두가지 방향에서 내다볼 수 있다. 우선 북한의 변화는 김일성의 사망 내지는 정치적 은퇴가 예상되는 3~4년 후가 될 것으로 내다보는 의견이다. 개혁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있는 권력엘리트들이 모든 권위의 원천을 김일성 일인의 신격(神格)에서 찾는 상황에 있는 북한에서 누구도 <수령님이 창조한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

115) 지난 9월초 평양에서 열린 북한-소련 외무회담 내용이 북한 외교부장 김영남의 비망록으로 북한은 9월 19일자 「민주조선」에 전문 소개했다. 이 전문에서 김영남은 소련의 한국과 수교를 맺는다는 것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진복하려는 미국과 한국의 공동 음모에 가담하는 것이 되며, 한국이 이를 이용하여 독일식으로 북한을 흡수 통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망록 요지는 조선일보, 1990년 9월 21일자 참조.

기하고 고치자는 주장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¹⁶⁾

이에 반하여 그 시기가 예상외로 빨라 김일성 생전에 북한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주체도 김일성이 된다는 것이다.¹¹⁷⁾ 이 견해에 따르면 김일성은 수령으로서의 정상적인 집무가 어려워질 정도로 고령화되어 있으며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무모한 판단이나 결정을 내릴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김일성도 이를 인지하고 있을 것이며 누구 못지 않게 심각한 경제난, 사회주의권의 대변화, 그리고 탈냉전적인 세계질서를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또 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체제개혁이 불가피함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70년대초부터 시작된 김정일로의 권력승계가 아직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고 보면, 개혁의 과제를 김정일에게 넘겨주어서는 그로 인해 혼란과 부작용이 엄청나게 클 것이라는 점도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김일성은 그동안 다져온 김일성체제를 살리고 김정일 후계체제구축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의 체제에 대한 재편성 즉 북한식 페레스트로이카를 단행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논자도 이 견해에 동조하면서 내용에 있어서는 소련과 동구에 비해 대단히 미흡할 지는 몰라도 김일성에 의한 북한식 개혁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주체주의의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도 내외적으로는 크게 눈에 띄지 않는 범위와 속도로 체제개혁을 시작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그 구체적 내용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치외교 부문

김일성은 소련과 동구의 개혁과 관련되어 세계의 주목을 끌었던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회의(90.5.24~26)에서 북한의 대응과 관련된 시정연설을 했다. 그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한다고 사회주의 원칙을 포기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주의를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더 나아가서 그는 북한사회의 발전은 항일투쟁에서 비롯된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원리·원칙에 의거해야 함을 강조했다.¹¹⁸⁾ 따라서 사회주의권의 변혁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오히려 기존체제와 노선의 강화라고 볼 수 있다.¹¹⁹⁾

116) 서대숙, "1990년대의 북한", 미국 하와이대학 한국학 센터에서 열린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1990.3.26~29)에서의 발표논문 참조.

주간<이데아>, 19호~20호 (1990.7.28~8.4)

117) 이상우, "평양의 봄도 멀지 않았다", 중앙일보, 1989년 11월 15일자. 김학준, "김일성 이후의 북한",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창립 2주년 기념세미나(90.7.23) 발표 논문 참조.

118) 로동신문 90년 5월 25일

119) 김남식, "동구의 충격 '주체사상' 변할 것인가", 역사비평, 1990년 가을호(10), pp.21~29.

그러나 북한은 대내적으로는 수령중심의 유일지도체제에 수정이 가해지지 않는 범위에서 민주화 추세를 의식한 부분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외적인 면에서도 국제질서의 탈이데올로기화에 편승하는 현실주의 외교노선의 전개가 가시화되고 있다.

가. 의견상 다당제의 수용

북한은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리 인민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되어 있는 사회주의 사회이기에 정치적 다원주의와 다당제가 필요없다고 강조한다. 그것은 오히려 인민대중의 정치적 통일을 파괴하고 사회주의체도를 허물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¹²⁰⁾ 그럼에도 지난 4월에 있었던 제9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는 의견상 다당제를 수용하는 조치를 취했다. 우선 대의원 선거를 위한 후보자 등록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인물서열을 발표할 당시 사회민주당 이계백위원장을 31번째로 거명했다. 또한 선거결과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구성에 있어 그동안 거의 의석을 가지지 않아 온 사회민주당 소속의 의원이 7.4%, 천도교청우당 3.2%, 무소속 1.9%로 나타났다.¹²¹⁾ 이는 소련과 동구의 민주화추세를 의식하여 나온 조치로 진정한 복수정당제로의 발전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의 경우 그 핵심이 다원주의의 인용임을 볼 때 북한이 일당 독재체제에서 벗어나 정치민주화로 나아갈 때 이 조치는 진정한 다당제의 틀이 될 수 있다.

나. 최고인민회의의 역할강화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내에 통일과 외교관련 위원회를 신설하여 그 동안 형식적인 법안심의 및 예산심의기능에 그쳐진 최고인민회의의 역할을 강조하는 조직개편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외교위원회를, 금년에는 최고인민회의의 개척시 통일정책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이는 사회주의권의 민주화를 의식하여 명목상의 최고주권기관에 불과한 최고인민회의를 명실상부한 기관으로 부각시키려 하는 것이다. 또한 외교관련위원회를 신설한 것은 이데올로기 중심의 당외교에서 벗어나 국가 및 의회외교가 주를 이루는 현실주의적 흐름에 조응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러한 개편은 당영도 체제에서 의회 및 국가기관의 분리내지는 자율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해 나가는 것으로 미흡하나나 다원주의의 틀을 형성케 할 것이다.

120) 로동신문 논설, 1989년 12월 22일자.

121)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자격심사위원장인 김중린의 보고(90.5.24) 정노관, "북한의 9기 최고인민회의의 구성동향과 정책방향", 공산권 연구, 1990년 7월호, pp.43~44에서 재인용.

다. 전문기술엘리트의 중용

제9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구성에 특이한 것은 박사, 교수 등 학위직 소지자와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이 지난 8기의 56%에서 64%로 증가된 것이다. 이들 테크노크라트들의 등용은 사회·경제의 근대화추진과 대외정책의 실용주의화를 촉진하는 배경이 된다.¹²²⁾

라. 일본과의 관계정상화

북한은 최근 그 동안의 노선을 바꾸어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작업을 급속히 진행시키고 있다. 지난 9월 28일 북한을 방문중인 일본 자민당과 사회당 대표들은 북한노동당 대표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는데 여기서 북한과 일본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국교수립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간 교섭이 11월 중에 시작되도록 합의했다.

북한은 정권의 정통성을 김일성의 항일투쟁에 두고 있으며 일본과의 수교가 「두개의 조선」을 현실화시켜 분단을 영구화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김일성이 직접 북한을 방문중인 일본정당대표에서 일본과의 수교를 직접 제의한 것은 지금까지의 그의 노선을 수정하는 것을 상징한다. 비록 최근의 한소수교와 한중관계 개선이라는 정세변동에서의 대응과 침체에 빠진 경제회복에 그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는 분명히 북한의 대외정책의 새로운 전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 경제부문

김일성은 위에서 살펴본 최고인민회의의 시정연설에서 사회주의권의 개혁 특히 자본주의적 요소의 도입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하고 있다. 그는 북한사회주의가 경제건설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해결을 소련과 동구식의 자본주의적 방법에 입각하지는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¹²³⁾

그러나 북한은 1984년 합영법 이후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해왔고 최근 2년동안 더욱 가속화되어 왔다. 그러한 조치들은 반사회주의적 원리에 입각해 있어 <조용한 혁명>, <실무혁명>이라고 평가되고 있다.¹²⁴⁾

가. 시장경제원리의 도입과 확산

북한은 지난 1984년 8월 3일 김정일의 지시로 「인민소비품확대(8.3)운동」을 전개해 오

122) 앞의 책, p.44.

123) 로동신문 90년 5월 25일.

124) 연하정, "북한 개방화의 방향", 월간조선, 1990년 4월호, pp.368~369.

고 있다. 이 운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북한은 1989년도 부터 생필품 증산운동 및 직매점설치확대 등을 통해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했다.¹²⁵⁾ 그 이후 이러한 방식은 주택건설분야를 위시한 각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북한은 시-군 단위로 농민시장(장마당) 내지는 도시의 상설시장을 공인했다. 이를 통해 식량의 배급제에서 오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인데, 이곳은 현물구매 또는 물물교환의 장소가 되고 있다.

나. 부분적인 私경제 행위 허용

최근의 북한방문자들에 의하면 도시에는 개인사업자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채소나 염료수 등을 파는 행상과 광장에 있는 사진사 그리고 기차역 앞에 손님을 기다리는 삼륜차 운전사 등이 바로 그들이다.¹²⁶⁾

또한 생산성 증대를 위한 인센티브제가 공장이든 농장에 도입하여 생산량에 따라 현금 보너스 내지는 잉여수확분의 자율처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 화폐경제로의 전이

그 동안 사용되어온 양권 등의 배급표 대신 새지폐의 유통이 늘고 있고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경우 이자가 지급되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복권제도도 실시되면서 당첨자는 고액의 현금을 손에 넣을 수가 있게 됐다.¹²⁷⁾

라. 경제특구의 설치

북한은 최근 UNDP(유엔개발계획)의 두만강 유역개발계획 타당성 조사와 관련 선봉지역을 경제특구화 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중국은 합영법이후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외국인간자본을 도입해왔다. 경제특구는 국내적으로 계획경제체제를 남겨둔 채 그 일부에 외국자본을 도입하는 것으로서 자본형성과 외화획득을 실현시켜 그 위에 서방측 시장 매카니즘의 국내침투는 정책당국이 주변에서 통제하는 일종의 완충지대인 것이다.¹²⁸⁾ 북한이 그동안 미루어 온 경제특구 설치를 발표하여 두만강 지역 개발을 위한 동북아시아 경제협력 분위기에 적극 참여함은 지금까지의 개방정책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125) 소비재 생산에 있어 실적당 급여체제를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연하청, "남북한 경제협력의 정책과제", 민족통일연구원주최 제1회 국제학술회의 「북한사회의 실상과 변화 전망」(91.10.28) p.4.

126) 최근 북한은 사유재산의 허용범위를 높이는 민법을 채택하기도 했다. 제9차 최고인민회의(91년4월)는 일용품, 가전제품, 자동차 등 소비재의 사유를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다.

127) Gary Klintworth, op.cit., p.21.

128) 고토오 후지오 "북한경제의 실상과 전망" 민족통일연구원주최 제9회 국제학술회의 「북한사회의 실상과 변화전망」(91년10월28~29일) 주제발표.

3) 사회부문

북한은 그 동안 생활환경과 정보의 통제로 사회의 획일화를 유지해 왔다. 최근에는 정보의 통제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으나 인민들의 생활환경에 있어서는 완화조치가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우선 일정 전략지역(청진, 함흥, 판문점 등)을 제외하고는 여행제한이 많이 완화되었다. 여행객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도 해변과 산간 등지에 많이 확충되고 있다.¹²⁹⁾

주민들의 옷차림과 머리모양이 현대화·다양화 되어가고 있으며, 바둑, 야구, 골프 등 「자본주의적」인 레저 스포츠 등이 등장하고 있다. 대중가요나 영화에서도 이러한 변화들을 반영하고 있다.¹³⁰⁾

4. '중국식 개혁'에의 길

근자에 나타난 북한의 대외관계의 변화는 바로 사회주의권의 대변혁과 국제질서의 개편 그리고 경제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전환으로 여겨진다.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의 지도층은 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적응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조정이 불가피함을 알고 있다. 김일성과 김정일에게는 지난 70년대 초부터 추진해 온 권력의 승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의 체제에 대한 재편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변화는 지금까지의 사회주의권의 변화유형에서 어느 모델에 가까울까?

북한의 지도층이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즉 정치와 경제부문을 비롯한 전면적 체제개혁을 단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보겠다. 소련식 체제개혁은 활력있는 사회주의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출발했으나 격국 지난 8월정변의 실패 이후 사회주의체제의 몰락을 가져오게 되었다. 김일성이 지금까지 행사해 온 유일적 지배권의 상실이 초래될지도 모를 소련식 개혁모델을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김일성은 자신이 누리는 독점적, 배타적 권력의 상실은 곧 자신의 정치적 생명의 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는 길을 스스로 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택할 수 있는 개혁로선은 결국 중국식 개혁에의 길이다.¹³¹⁾ 지금까지 다

129) Gary Klintwath, op.cit., p.21.

130) 이찬삼, "다시 가본 북한", 중앙일보 1990년 9월 18일.

131) 북한이 중국식 개혁의 길을 갈 것이라는 전망은 다음의 글을 볼 것. 이상우, "페닌주의의 이상과 현실-북한체제의 변화전망", 서강대 동아시아연구소와 국립정치대학 국제관계연구중심 주최 제12차 한중학술회의(91.10.21~22) 주제발표.

겨운 체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내외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나아가 체제의 활력을 찾는다는 입장이다. 즉 정치부문은 기존노선을 오히려 강화하면서 경제력 회복을 위한 개방정책은 탄력성을 보여줄 것이다.

정치부문에서의 기존노선 강화는 곧 주체사상과 유일지도체제를 더욱 고수함을 뜻한다. 이에 따른 관료화의 병폐는 계속 지속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소련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관료화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권력의 분산과 사회의 민주화의 전망은 어둡다고 하겠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경제개발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경제체제에 대한 개혁이 불가피해졌고 이는 사회의 민주화 요구로 이어졌다. 천안문사태가 바로 그것이다.

북한도 경제개방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제체제에 대한 개혁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주체사상이 그 장애가 된다. 그렇다고 수령론에까지 이르는 주체사상에 대한 어떠한 변화는 곧 김일성 1인 지배체제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북한의 지도층은 지금의 정책을 고수해 나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밑으로 부터의 민주화요구의 불길을 계속 지피면서 북한은 당분간 주체사상에 입각한 북한식 관료체제를 유지해 갈 것이다.

그럼에도 향후 북한체제의 장기적 전망은 정치민주화의 필요성과 요구를 집권층이 적극 수용해 나가는 민주개혁의 길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밑으로 부터의 민주변혁이냐 하는 양자의 선택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한다.

VI. 맺 는 말

21세기를 향한 세계 역사적 전환기에 우리는 처해 있다. 20세기를 지배했던 냉전체제가 와해되어가고 있고, 사회주의권도 대변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있다. 이로써 적어도 세계 사적 차원에서는 이데올로기 시대의 종말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대신 세계는 개방화, 다변화, 국제화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북한은 선택적인 대외개방화를 통해 사회주의권에 밀어닥칠 도전에 대응해 왔다. 그러나 1989년에 시작되어 1990년으로 이어지는 소련과 동구의 탈공산주의화라는 대변혁은 주체사상의 질적변화와 선택적개방을 통한 사회주의 고수라는 북한의 전술적 대응을 무력화시키고 볼 수 있다. 현대 공산주의는 외부의 힘에 의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 자체 모순에 의해 더 이상 유지가 어려운 데서 자기변신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40여년간 내외환경의 도전속에서 권력을 유지해 왔고 북한 사회주의를 이끌어 온 김일성으로는 민주화와 개방화라는 역사 흐름 속에서 북한만이 이를 역류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여 개혁을 통해 활기찬 사회주의국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종래의 정책으로부터의 과감한 탈피가 불가피함을 알고 체제개혁에 나섰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의 개혁조치들은 주체사상과 김일성체제의 틀 안에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권의 변혁에의 대응과 침체된 경제의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조치들이 소련과 동구에 비해 극히 미세하다고 평가되나 점차 그 폭이 넓어지고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기존체제와 노선에 대한 페레스트로이카임을 보여줄 것이다. 북한이 추진하려는 개혁·개방의 길은 결국 중국식 개혁·개방 뿐이다. 그러나 중국식 개혁·개방 정책이 추진되다보면 북한은 그동안의 폐쇄체제가 장막을 걷히게 될 것이다.

이와같은 북한의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첫째로 북한이 개혁을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북한을 코너로 몰아가는 정책을 삼가야 한다. 최근의 남북총리회담과 핵정책에서 드러난 북한의 태도는 적극적으로 자신감에 넘치는 외적인 언행에도 불구하고 독일식 통일과 소련 및 동구의 변혁에 따른 체제붕괴에 대한 우려가 큼을 보여주었다. 북한이 자신의 체제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끼는 만큼 기존체제의 고수에 집착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북방정책과 통일정책은 보다 사려깊게 그리고 대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 체제에 대한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해야 한다. 우리 사회내에 모순과 부조리 현상이 만연해 있다고 북한이 판단하는 한 공산통일의 꿈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체제개혁에 박차를 가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복지화 그리고 민족화를 다지는 일을 시급해 해나가야 한다.

북한의 세계사의 새 흐름에 동참하도록 하는 힘은 우리 체제내부에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